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에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지키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2년 인권이사회>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  
 세중, 대한변협)는 지난 3  
 월 28일 검찰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검사의 피의  
 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  
 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1월 4일 안  
 회권 검사가 피의자 김동  
 철(37)씨의 옆구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김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0늑골 골절상 및 두피  
 열창 등을 가한 사실이 진  
 상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  
 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집  
 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  
 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  
 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  
 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  
 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것  
 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

처분에 그친 것은 법적용  
 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되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지난 2월 15

일 안 검사(현 춘천지검  
 영월지청)를 독직폭행혐의  
 로 고발하고, 같은 달 25  
 일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 재독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 귀국 무산 안기부 '각서' 요구에 '귀국추진위' 거부

독일에서 통일운동을 벌  
 여온 이영빈목사 내외의  
 귀국이 무산되었다. 「이목  
 사 귀국추진위」(대표 김지  
 길 목사)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국내법을 준수  
 한다는 각서를 쓴다면 '고  
 려해보겠다'는 안기부의 태  
 도에 「이목사 귀국추진위」  
 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4일  
 로 예정되었던 이목사의  
 귀국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귀국추진위의 송병구 간  
 사는 "김영삼 정부가 진실  
 로 문인정부라면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아무런 간  
 섭없이 이 목사의 귀국을

대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  
 기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목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목사 내외는 4일 독일  
 에서 "민족화해를 위하여  
 애쓰는 개인이나 단체를  
 정부는 격려하고 지원해야  
 될 일"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모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목사 귀국추진위」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  
 는 모임」(대표 신경하 목  
 사)은 4일 공동성명에서  
 "반성문과 각서요구 등의  
 구태의연한 발상은 관계당  
 국의 도덕성을 판단하게  
 한다"며, "안기부가 어떠한  
 이유로 이목사의 입국을  
 저지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목사 귀국추진  
 위」는 95년에 다시 이목사  
 의 귀국을 추진하기로 결  
 정하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이목사의 글을 담은 「통일  
 과 기독교」 출판기념회를  
 연세대 알렌관에서 오후 5  
 시에 연다고 발표하였다.

### 일빛·힘 대표 석방 요구 43명 출판인 성명

지난 3월 일빛출판사 대  
 표 이성우(38)씨, 힘출판사  
 대표 김연인(32)씨 등 출  
 판인의 잇단 구속에 항의  
 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  
 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4일 김학인(학민사 대표),  
 나병식(풀빛 대표)씨등 출  
 판인 43명과 가족들은 '최  
 근의 출판인 구속사태에 대  
 한 출판인의 견해'를 통해  
 △문제가 된 서적이 몇년전  
 의 일이고, △현정부 출범  
 이전의 정치·경제 상황을  
 다룬 서적이라며 출판당시  
 에도 문제삼지 않은 책을  
 뒤늦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하는 것은 일부 공안세력이  
 출판계 자체를 염두에 둔  
 정책성 출판탄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해투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  
 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위원장 조준호, 전해  
 투)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  
 당시절 전면적인 철책을 주  
 장한 국가보안법의 멍을 씌  
 워 함평기(전해투 조직부  
 장)씨 등을 연행한 것은 노  
 동운동에 탄압"이라는 성명  
 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함  
 씨 등을 포함한 모든 구속·  
 수배 노동자에 대한 석방과  
 수배해제를 요구했다.

함씨는 지난 3월 28일  
 「혁사노」 관련 활동을 한  
 혐의로 여의도백화점 앞에  
 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간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  
 하루소식>을 한편의 책으로 묶어 발간되었  
 습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  
 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문민'정권 1년  
 의 인권」 등이 실렸습니다.

값 : 1만 5천원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지상중계/2-3면

###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안했던 사실로 다시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공소권 남용’으로 상처받는 고희권씨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가 제기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92년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받은 고희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지난 2월 16일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고희권(31, 전 목포민주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92년 사노맹 유인물 배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당시 고희씨는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받다 안기부 광주지부로 넘겨져 사노맹 가입사실에 대해 조사받고 그 사실을 인정, 유인물 배포혐의와 사노맹 가입사실에 대해 같이 공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3년 3·6사면으로 석방된 고희씨에 대해 광주지검은 사노맹 가입 및 회합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 사실은 모두 92년 수사기관에서 고희씨가 인정한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93년 석방 이후의 활동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희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

에서 서증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한 조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공소권 남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방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희씨의 부인 박인애씨는 고희씨가 “9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데 이어 그 당시 조사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 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때에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기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10일 개원

경기도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할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산자교회 목사)이 지난 10일 문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준비이사회(이사장 이해학 주민교회 목사)는 성남 주민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40여명과 이운수(민주당의원), 오길성(성남 지역노동조합총연합), 코라인도대사관 참서관 등 1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연락처는 0342-757-8093

#### ( 1면에서 계속 )

인 이상용씨, 이씨의 차남 이아무개씨, 이씨가 파출부로 나가다가 알게된 아주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재판부에 이씨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인천, 안양, 수원 등지에서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 ( 1면에서 계속 )

이후에도 미군병사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씨와 다른 피해자에 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충분한 보상과 제반 필요한 조치와 미군병사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4월중에 인권위원회를 열어 법률구조사업회를 통해 정씨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정씨도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운동본부)는 정씨사건의외에도 “지난 3월 2일 등 두천에서 미군헌병대가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김지호(29)씨를 수갑을 채운채 연행하여 조사를 하는 등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운동본부는 다음주 중에 정·김씨사건을 포함, 이와 유사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미대사관과 미8군사령관 등에게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 알 림 ◆

##### □「시민과 변호사」 4월호(통권 3호)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상고심 사제에 관하여

#####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의 발간

·내용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민변 등

·주요내용 ;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제를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의학전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양길승)/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고문(오완호)/고문후유증 사례-강환웅, 김복영 등 11명/유엔고문방지협약/고문에 관한 의학자료(외국 번역문) 등

##### □성희롱사건 자료집 「침묵에서 외침으로」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요내용 ; “나는 이제 봄이 되고 싶다”(우조교)/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진상/성희롱이란 무엇인가/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외국의 법적 대책/미국의 예를 중심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등

##### □여성의 전화 엿듣기-쉼터이야기(도서출판 그린비)

- 쉼터(소개 및 안내서):

##### □함께 가는 길(3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여연의 93년 사업평가와 94년 사업계획/3·8 세계여성의 날-알아봅시다/30대 직장여성들 공동육아추진 눈길등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블테르)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 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 승주 의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아를 떠돌며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벌목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것과 이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토록 하며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탈출 벌목공들은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의하면 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최근 북한과 중국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

하는 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난민에게는 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당해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받을 지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민주당 『경찰백서』 출간 "중립적인 경찰상 기대"

민주당 내무위 소속의원 이 보좌진과 내무전문위원 12명이 경찰행정의 문제점 및 해결의 대안을 담은 책을 펴냈다.

이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일반인이 좀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생생한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경찰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대안을 대증적으로 공유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업했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93년 정기국회 후부터 우려곡절을 거치며 3개월여의 작업 끝에 완성된 『경찰행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장에서 여소야대 시절의 경찰법 개정논의와 3당합당 이후 정부가 제출한 경찰법안의 통과과정을 다루고 있고, 3장에서 경찰위원회, 경찰예산, 경찰의 인사제도, 수사권 독립 등의 주제를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의 순서로 서술하고 있

다. 4장에서는 좀처럼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경찰교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자치경찰, 경찰부속기관 등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다.

직접 책을 집필하는데 참여한 한 비서관은 책을 낸 동기에 대해 "경찰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중립성·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집필자이기도 한 김충식(민주당, 내무위) 의원의 비서관인 최문희씨는 "경찰이 제출한 1차자료를 토대로 12명이 공부하고 토

### 정신대 114차 수요시위 법적 해결은 인권강제 계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이효재, 정대협)는 13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14차 수요시위를 벌였다.

정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신대문제의 올바른 법적 해결을 통해서 전쟁범죄 및 인권문제에서 후진지대인 아시아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을 통해 집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찰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경찰이 민주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중립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과 인사의 개편,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경찰상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개혁과 인권』 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엠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엠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시국사범의 성향,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남북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정부가 보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시각차이도 설명했다(국판 90쪽/ 문의-법무부 인권과, 02-503-7045).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린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장애인 자유로운 이동권 절실하다”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정치인등 휠체어타고 직접 체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녹색교통운동(운영위원장 정운광)·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통일)가 주관하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이 20일 탑골공원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정대철(민주)의원은 추사를 통해 “4백만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회측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넘어

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구조는 해마다 5만명의 교통장애인을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인·노인·어린이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교통 소외계층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는 일이다”고 선언했다.

1부 행사를 마친뒤 참석자들은 최형우내무부장관, 이부영의원, 이철의원, 김말홍의원 등이 휠체어에 타고 도보·지하철·시내버스를 이용해 다음 행사 장

소인 마로니에공원으로 향했다. 1시간에 걸친 행진은 명사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보도턱, 횡단보도를 양산하는 '제도적 폭력'으로 자라나고 있다”며 “장애인·노인·어린이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교통 소외계층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는 일이다”고 선언했다.

3부 행사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지하철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 발표' 및 장애체험 참가자들의 소감 발표와 노래공연으로 마련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 이윤수의원은 “지하철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음을 느꼈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겠다”고 느낌을 말했다

다. 휠체어를 타고 버스로는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은 “국가경쟁력보다 복지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김삼석씨 조사 안기부원 성추행고발건

서울지검 윤석정부장검사는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김삼석씨를 불러 안기부원이 성추행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0월20일 윤미향씨는 남편 김씨가 안기부원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고발을 낸 바 있다.

문목사 추모행사 줄이어

문익환목사 사망 1백일이 되는 27일을 전후하여 추모행사가 줄이어 열리고 있다. 문목사가 생전에 준비하던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주최로 사진전·추모공연등을 마련했다.

###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내

개학 이후 학교가 폐교돼 마을회관에서 학부모와 공부중인 두밀리분교 학생들이 19일 이석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리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리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

로 2월 28일자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교처분은 헌법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위반하였으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학교부지, 교실등 각종 교육여건을 다른 곳에 우선하여 마련해야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폐교한 것은 진흥법에 위배되어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급히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늦봄 문익환목사 추모행사 안내◆

- 자택방문 및 유품전시 : 4월17-27일, 오전10-오후5시
- 추모사진전 : 4월21-30일, 명동성당 문화관
- 추모예배 : 4월26일 18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추모좌담 : 생애와 사상, 26일 18시, 기독교회관 2층강당
- 통일대토론회 : 27일 오후3시, 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
- 묘소참배 및 묘비제막식 : 27일 11시, 마석모란공원
- 추모공연 : 27일 오후7시, 연세대 노천극장

### ◆ 행사 안내 ◆

-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토론회
- 21일(목) 오후 2-6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통일시대 준비위원회 · 민주대학
- 주제발표 : 남한의 인권문제 (한상범 동국대 교수), 북한의 인권문제(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발기인대회
- 21일(목) 오후7시, 명동 전진상교육관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비폭력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사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라  
(곽노현)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원진 작년 합의후 해결된 것 없다

###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작년 11월 9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에서 '원진레이온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23일 갖기로 하는 등 다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원진비대위는 작년 합의 이후 직업병에 대한 민사 배상등을 담당해야 할 원진재단 이사에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부인들이 임명되어, 폐업이후 발생한 35명의 직업병 환자의 배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진비대위에서는 노동자의 대표의 재단이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합의 이후 11

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당정은 원진 노동자들을 정부투자기관인 제2기 서울지하철공사나 남양주군 영화종합촬영소 등의 신규인력 채용시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진비대위는 지하철공사는 6월경에 공채예정이고, 촬영소는 95년 9월경부터 부분가동하나 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라서 실제로 원진노동자의 취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기업에 취직하려는 원진노동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취업이 안되고 있다.

또 작년 합의성에서 직업

병 환자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산재종합병원 설립계획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특수건강검진을 결과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환자로 판정받은 노동자는 32명이며, 8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340명에 이른다.

한편 한국산업은행에서 원진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원진합의서 이후 법원에서 원진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11월 30일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임직원 부인을 이사로 임명하여 11월 23일 법원 설립등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에 임원을 사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에는 이순심씨를 아는 이웃사람을 포함해 수원 문화원 주부대학 동문회, 수원여성회, 안양YWCA, 인천여성회 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등 20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방청인단은 재판방청은 물론 서명운동 작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와 수원여성회 전화에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 그린피스 24일 출항 경찰등 행사 방해도

지난 4월 12일 한국을 방문한 그린피스호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출항한다. 그린피스는 서울·부산·광주·인천 등 대도시와 삼척·영광·울진 등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조사사업을 진행시켰다. 각 지역마다 2천5백-3천명의 주민들이 모여 집회를 벌였는데 그곳 주민들의 반응에 그린피스호 실무자들 역시 놀라워 했으며 환경운동연합측은 "군함과 해양경비정이 동원되어 그린피스호와 주민들의 해상시위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중에는 경찰의 방해도 심했는데 핵발전소 쿠틀채취 작업시에 취재방해는 물론 행사주최인 환경운동연합 실무자들이 묵고 있는 숙소까지도 경찰들의 감시가 따랐다고 한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행!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93년 8월부터 94년 2월초-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주제별 색인을 넣어 특정사건을 찾아보는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인권상황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연구자 등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우송해 드립니다.

값 : 1만 5천원

(4월 현재 구독료 납입총액이 4만원 이상인 분에게 무료 기증하고 있습니다)

### 이순심씨 석방 서명운동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1차 서명운동이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안양·수원 지역에서 4시간동안 진행된다. 3월 21일 결성된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차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 원진직업병 환자 또 10명 발생

### 올들어 42명 발생 지금까지 모두 359명 사망 16명

지난 해 7월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진레이온 출신노동자 10명이 이황화탄소 증독에 따른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 원진비대위)는 지난 해 9월부터 7개월간 핵자기공명단층촬영, 근전도, 청력등 8개항목에 걸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김종호(50)씨등 10명이 이황화탄소 증독증에 의한 직업병 환자로 확인돼 14일 노동부로부터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황화탄소 증독증에 의한 직업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은 94년의 42명등 모두 3백59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16명에 이른다.

한편 원진비대위는 정부가 원진레이온 폐업결정을 하면서 발표한 원진노동자 재취업 종합대책이 지켜지고 있지않다고 밝히며 21일 증포공원에서 '원진노동자 재취업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시청에 항의방문을 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황화탄소 증독증은 유해작업환경과 떨어져 있어

도 병세가 진전되는 '긴행성 질병'으로 근무기간, 퇴직후 기간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지난 91년 5월 시위등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씨의 어머니 김중분씨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1차 공판이 17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 심리로 서해성(당시 김씨 사망원인 조사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서씨는 경찰이 최루탄을 난사하는 등의 시위진압 상황을 설명했다.

김중분씨등은 지난 93년 5월 당시의 시위진압이 신체에 직접위해를 가하지 않을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진압행위를 넘어선 폭력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1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결심공판은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 고 김광삼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비전향장기수 고 김광삼씨 49재가 오늘 오후 음성꽃동네 묘역에서 열린다. 추도식에는 장기수 할아버님들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충북민족민주연합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중격동중양'으로 숨진 고 김광삼씨는 55년 군산에서 체포되어 20년형을 받고 75년 출소했다. 77년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복역뒤 80년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다가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 한·일 보육운동의

###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오늘 2시 종로성당

한·일 보육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이 '한·일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로 오늘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회장 최현숙, 지탁연), 「일·한 보육교류연수협의회」(대표 김덕환) 등의 주최로 열린다.

신현희(35·지탁연) 사무국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이후 한·일 탁아교사교류회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으로는 스즈키 쇼조(유유아발달연구소장)씨가 「지역보육운동」에서의 나의 주장'을 발표하고, 호리 마사쓰구(유유아발달연구소 주임연구원)씨가 '일본의 보육현황과 보육운동의 과제'를, 장미경(지탁연 정책연구부장)씨가 '한국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심포지움뒤 그 자리에서 한·일 탁아교사교류회가 열린다. 문의 지탁연 275-8505

### 윤금이 살해범 마를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를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를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미 대법원에 냈으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이를 기각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주한미군 운동본부)는 17일 성명에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한미정부에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행정협정(본문 22조 7항)에 의하면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이라도 미국정부가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차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 두밀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에 부당한 압력행사 밤중에 전화·이장에 사퇴압력

지난 2월 28일 폐교조치된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가 있는 두밀리 주민들이 폐교철회를 요구하며 마을회관에서 25명의 학생들에게 자체학습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읍사무소, 가평군 교육청등에서 두밀리 주민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가평읍사무소 총무계장은 두밀리 이장 신흥균씨에게 "두밀리 동향보고를 왜 안하느냐.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 소식을 들은 두밀리 새마을지도자 김세경씨 등을 비롯

한 개발위원, 반장 등이 이에 분개, 모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원회'(대표 신흥균)가 서울고법에 제기한 '두밀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후 가평군 교육청(교육장 조동현)과 상생국민학교 교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로 밤중에 전화를 걸어 가처분기각 사실을 들어 폐교철회요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다. 또 지난 25일 처음으로 학생 4명이 학교에 등교했으나 학교교사가 가방을 사주고 읍내에 데리고 가 점심을 사준

사실이 밝혀지자 두밀리 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물질로 유혹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25명중 4명이 처음으로 학교에 나간 날 산골벽지에 사는 아이에게 읍내에 데리고 나가 점심을 사주는 등의 행동은 선뜻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밀분교 폐교철회 추진위'는 최근의 이 같은 압력과 회유가 잇달아 발생하자 가평군 교육청, 가평군청, 가평읍사무소 등에서 오는 30일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어 두밀리 주민들의 뜻을 표현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수에 비해 과중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두밀분교를 폐교 처분했지만 이는 명백히 소외지역의 교육을 진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두밀분교는 이 법에 의해 의무교육대상학교로 지정되어 교사수, 학교시설 등 여러가지 교육에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받아야 하는 학교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학교 폐교조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UR타결등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농

촌정책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밀분교 폐교를 둘러싼 움직임은 정부의 농촌정책, 교육정책등이 뒤섞인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목적수행죄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김삼석·김은주씨의 항소심 2차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한통련의 성격, 피고인들과의 관계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한편 정치인, 학자 등 147명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통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죄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씨는 회합통신,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다. 결심공판은 6월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

### 안기부 고문사려 증언 26일, 민가협 목요집회

제36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26일 오후5시 탑골공원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고문피해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백태우씨의 어머니 유정옥씨등이 나와 약물고문, 고문과 실신 그리고 의사의 치료가 이어지는 안기부의 고문을 증언했다.

### ◆ 행사 안내 ◆

□해고노동자 복직 및 원진, 자보문제등 당면 노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대표 54인 기자회견

- 일시 : 5월 2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윤공회, 탄성, 김정환, 장웅병등 54인

□'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3차 강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의실
- 주제발표 : 성폭력과 여성(신혜수)-장애여성의 인권이 침해되는 특수한 상황과 이유, 장애여성의 권익회복을 위한 국제연대 방법의 구체적인 예등/지역사회의 여성의 대응과정과 성과-청주성화원의 사례발표(남정현)

□"개혁과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하나"-광주민주화운동 14주년 기념토론회-국민회의 추진하(☎ 725-2581,3)

- 일시 : 5월 27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불교방송 3층대강당(마포가든호텔옆)
- 주제발표 : 김일수(고려대 교수, 배동인(강원대 교수)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지지회견 중>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KNCC 인권위원회 20주년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의 주제로 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27-28일 온양제일관광호텔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오후2시 개최예배로 시작된 인권정책협의회는 2시 40분 대토론회로 이어졌다(2면 참조).

토론회에는 조희연(성공회신대) 교수가 '민주화 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을, 박원순 변호사가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을, 임태수(호서대학) 교수가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을 발표했다. 뒤이어 는찬에는 오재식(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설 사회교육원) 원장, 조화순 목사 등이 참여했다. 또한 사례보고는 △정신

대문제(권희순 목사) △의국인노동자문제(김해성 목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조재학 주한미군범죄근

절운동본부 간사) △성폭력문제(박상희목사)로 나누어 논의되었다.

###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2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종걸 변호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과 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형사책임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성희롱의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노동법상의 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금지라는 헌법상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노동의욕 저하등의 영향을 주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노동부와 각 노동위원 또는 정무2장관실내 여성고용문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장내 성폭력 전담기구와 신고센터를 설치, 구제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 성폭력 예방과 벌칙조항을 두며, 연수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노동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무관은 대책마련으로 △직장내 성문화 실태조사 △여성단체활동 장려, 지원 △자료집 발간등을 약속했다. 최(노동부 부녀소년과) 사무관은 현재 성희롱에 관한 정부역할을 논의중이며 사용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운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성희롱의 문제를 성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의 부재와 섹스문화를 조장하는 정부정책,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용자측의 문제를 들었다. 대책에 있어 그는 교육·문화·노동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남녀고용평등법등 목적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련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공동의장 허명섭·백남운, 기사련)은 27일 오후5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교회협 난입규탄 및 철도·지하철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오후 8시에는 KNCC 경찰난입 규탄집회를 2층강당에서 열었다.

기사련은 성명서에서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하는 징조라며 △연행, 구속 노동자 즉각 석방 △공권력 남용과 교회협에 대한 경창난입의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철도·지하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 공 판 안 내 ◀

#### □6월 28일(화)

- 이순심씨사건, 9시3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 두밀리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
- 조돈희,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1회
- 임창춘,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2회.

#### □6월 29일(수)

- 김태일의4,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
- 최영익,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 마광수의, 음란문서제조, 11시, 서울지법 418호

#### □7월 1일(금)

- 최은하,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423호, 선고

<이달의 주제 - 국가보안법>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서 싸울 것이다.  
 (볼테르)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살인누명 옥살이 김기웅순경 복직 결정

14일 서울고법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경찰될 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전 관악경찰서 신림9동 파출소 김기웅(28)순경이 서울지방법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순경은 이날 "우선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면서 "순경으로 복직이 되면 억울한 사람을 돕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파면사유중 하나인

살인죄는 진범이 불잡히고 무죄가 확정된 이상 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당시 파출소 근무를 이탈한 사유만으로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92년 11월 29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 2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해 12월 진범이 불잡힌 뒤 12월 1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나 지난 4월 8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민가협 31차 목요일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

1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의 제31차 목요일집회는 안기부에

불법연행되어 고문을 당한 양심수 가족들의 피해사례를 듣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사례 발표자에는 92년 9월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장창호(대구교도소 수감중, 12년

형)씨 부인 차정원씨와 90년 10월 노동해방문학실실장으로 사노맹사건과 관련, 구속된 장민성(진주교도소 수감중, 5년형)씨 어머니 이숙이씨, 그리고 90년 10월 자민통사건으로 구속된 전대협4기 의장 송갑석(대전교도소 수감중, 5년형)씨의 큰 누나 송미숙씨가 나왔다. 차정원씨는 "불법연행된 뒤 20일 동안 단 1번의 면회가 있었으며 그것도 안기부직원이 함께했다. 24시간 내내 전기불을 켜놓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구타와 가족들을 들먹이며 협박까지 했다. 하도 많이 맞아 몸의 감각이 없었고 단 10분이라도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남편은 말했다"며 울먹였다. 그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수사마저 안기부 직원이 참석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번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인터뷰 : 김기웅 순경

- ▲경찰에 복직하게 된 소감은?  
-경찰복등을 새로이 지급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 ▲살인누명을 쓴 16개월동안을 회상한다면?  
-엄청난 경험을 했었다. 사실 그동안이 꿈만 같다. 지금도 피고인석에서 절규하는 꿈을 꾸곤 한다. 가족들도 내가 어딜 가면 꼭 함께 가곤 한다. 너무나 놀란 가슴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 같다.
- ▲경찰에 복직하여 하고 싶은 부서는?  
-원래대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힘들기는 해도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고, 또 억울하고 힘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 ▲12명의 동료경찰을 가혹행위로 고소했는데...  
-나를 고문한 경찰들은 나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쓰든지 해서 경찰을 빨리 그만두어야 한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 ▲관악경찰서로 재배치된다면?  
-주거지인 수원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원대복귀된다 하더라도 더욱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 ◆ 행사 안내 ◆

- ☐ 제5회 4월혁명상 시상식 및 4월혁명 34주년 기념토론회-사월혁명연구소(전화:888-3682)
- 4월혁명상 수상자 : 민가협, 임수경
- 일시 : 4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홍사단 강당
- ☐ 『날마다 일어서는 부부』 출판기념회 -아시아 여성신학교육원
- 일시 : 4월 15일(금) 오후 3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 바로잡습니다 ◆

4월 14일자 '민주당 『경찰백서』 발간' 기사중에 "김충식(민주당, 내무위) 의원"은 "김충조 의원"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이달의 주제 - 아동의 권리 >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특별위 구성 요구 유가협 국회 의사당 앞 시위 청원 제출 예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가협 회원 10여명은 20일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회내 의문사진상규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의

문사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의 출근시간을 이용해 진행될 홍보작업은 다음주 24-28일까지 계속되며, 28일에는 위의 내용으로 국회청원을 할 예정이다. 그뒤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의문사문제 해결촉구 작업을 벌이게 된다.

아에게 동등한 권리를 구현"해야 함을 역설했으며 평화교육은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평화교육센터'는 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제3차 총회에서 아시아의 종교인들이 모여 인류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교육단체이다.

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AI)는 20일 청소년단체 '생',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양심선언 가족 등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AI 조사관 클리어 맥베이, 베에르 로베르트와 유카안자코씨는 10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법무부, 19일 외무부 등 정부기구를 찾았다. 또한 민가협, 사형제도폐지위원회, KN-CC 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와 유서사건 강기훈씨·정현백교수 등 양심수, 사노맹사건가족, 류낙진씨 등 장기수감자들을 비롯한 양심수의 가족을 만나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인권교육을 서울평화교육센터 '장애인·가정·평화' 강연회

'서울평화교육센터'(이사장 김삼룡)에서는 '장애인·가정·평화'란 주제의 제2회 평화교육강좌가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종교인·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씨가 '인권과 인권교육'을,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교수가 '장애우, 가정, 평화교육'을 발표하였다. 서씨는 "우리나라에서 인권교육은 30여년의 군사독재와 고질적인 대입제도로 발발일 틈이 없었다. 91년 정부는 어린이 권리조약에 도입했지만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현실을 진단하며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

는 인권교육은 다른 삶의 권리를 또한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인간의 심성을 사랑하는 인성교육과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실천교육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교육의 도덕·윤리교과를 인권과목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2·3면에 발표문 발췌).

김교수는 평화교육이란 "평화적 체제를 구현하고 평화적 인간성의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진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어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장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장애

### AI 조사단 활발한 활동 인권단체등 방문 실태 조사

지난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조

AI 조사단은 25일까지 머물 예정이며, 22일에는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 ◆ 알 리 м ◆

####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 일시: 10월 23-27일
-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제인권봉사회(IS)
- 일 정:

- 23일(광주 ☎ 062-232-5809)-강의: 국제사회에서 불 처벌 'Impunity'에 관한 논의 진행과정과 국제법 기준 고찰/ 토론:광주문제를 주제로 한 대 유엔활동 등
- 24-25일 정동성가수녀원(서울 ☎ 735-7832)-강의: 민간단체의 국제제도의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토론: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 유엔을 활동을 할 것인가 등
- 26일(부산 ☎ 051-817-6460)-강의: 유엔인권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다른 국제인권제도 소개/ 한국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유엔활동을 펼 것인가 등

#### □ 민중연대와 통일을 위한 한마당 '아리랑'

- 일시: 10월 22-23일 오후 5시30분
- 장소: 경희대 노천극장
-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747-4364/5)
- 출연진: 정태춘·박은옥·노래마을·소리물결·조국과 청춘·어린이 노래단 등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간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 병무청의 약속 파기

#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울 2월 양심수들의 병역 면제 해결 약속을 받고 1년간의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와 과거정산을 통한 국민 화합을 위한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양군모 회원들에게 발부한 공문에도 "27세 이상 1년 이상 형 선고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국민역(징집면제)의 요건을 "2년이상 실형자(합산포함)와 1년이상 선고자 중 27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 4년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89년 3월25일부터 93년 2월24일 기간중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이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제처

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무청은 자신들의 행정처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미 시행령이 확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차근태(28·23개월 복역, 고려대 중문과 대학원1학기)씨를 포함한 30여명의 회원들은 병무청의 난태에는 연락을 받고 사회생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얼마전 학원을 차렸거나 11월에 결혼식을 잡아둔 사람등 양군모 회원들은 과거 또는 현재 대학원에 등록한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입대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군모는 "이번 병무청의 처사는 청원처리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월권적인 처사"라고 항의했다. 또한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에서 제외한다는 시행령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학원에 입학한 경력만을 문제 삼는 것은 기피경력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군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4일 병무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 민가협 57차 목요일집회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약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단식농성을 하는 서울구치소 양심수들을 위한'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 제57차 목요일집회가 3일 오후 2시 탐골공원에서 열렸다. 민가협은 국보법 철폐투쟁에 힘을 집중키로 하였다.

## 유가협, 청원 앞서 민자·민주당 방문 청와대 방문도

'의문사 전면 재조사와 국회내 의문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청원서' 제출을 하루 앞둔 3일 '전국민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 회원13명은 국회의사당 앞 시위와 민자당 정책1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밖에도 민자·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유가협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계속 항의방문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벌어졌는데 경찰측은 집시범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유가협은 4일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 오늘의 행사 ○

- 미헌병대의 한국인 세 모녀 불법감금, 폭행치사에 대한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과 가두홍보
  1. 주한미군사령부 항의방문/오후3시  
장소: 용산 미8군 사령부(남영역에서 삼각지방법면으로 행진예정)
  2. 가두홍보/오후4시30분-5시30분  
장소: 이태원 상가일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집결)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오전 9시  
장소: 기독교회관 6층 소회의실
- 인도유출가스누출참사-보팔참사 10주년 기념 집회  
시간: 오후6시30분 장소: 종로성당  
주관: 보팔참사 10주년 기념 한국행사위원회  
연락처: 노동정책연구소(749-6052)  
환경운동연합(735-7000)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경 사망사건

##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 -정수리에 피멍, 정갱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지난 10월 31일 오전 0시 10분경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 6내무반 소속 최태호 이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최초의 목격자인 박재우 이교에 의하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최이교가 화장실 안에서 목매신음중인 것을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안동성소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0시 50분경)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안동교도소측에 의하면 최이교는 포승줄을 80cm 가량 끊어서 화장실 경첩에 매어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 내일신문의 취재진이 취재를 하려 하였으나 교도소측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한편, 10월 31일 오전 2시경 교도소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망자의 부모와 친척들은 최이교의 사망에 대해 자살일 리 없다며 강력히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하고 제기

우선, 부모가 사망 8일 전인 10월 23일 면회하였을 때 최이교는 부모 앞에서 도 잘 웃지 않으며 '향후 2달간은 신병이기 때문에 옷지랄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던 점, 사체의 정수리에 0.7cm 가량의 피명자국이 있는 점, 정갱이 부분에 피멍이 있고, 딱지가 붙어있던 점, 최초 교도소측이 서울 부모에게 전화로 사망사실을 말하면서 순화끈으로 목을맸다고 했는데, 포승줄이

있던 점, 교도소측이 목격자와 관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며, 교도소 간부나 동료 경비교도들이 합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군당국이 민간인에게 현장 접근을 막기 때문에 사건의 초동 단계에 이미 의문사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우선이런 사건을 당하였을 때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검시 가족측의 의사를 입회시키며 시신촬영을 포함한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재호씨(문국진씨의 부친)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진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변호사는 이 진정서에 대해서 원고의 부모가 선처를 바라서 제출한 것임을 증인을 통해 확인시켰다.

그러나, 김여옥씨는 나이가 많고 기억력이 매우 감퇴해서 명확하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겼다.

(다음재판 12월8일 10시)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1. '의문사'는 국가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한 참혹한 인권유린행위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신성한 인권마저 마구 짓밟고 그를 통해 승진을 거듭한 자들이 그대로 현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더욱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덮어줄 것이 아니라 특히 인권유린의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어간 역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문사'는 분명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안기부, 기무사(전 보안사), 경찰, 검찰은 군사정권의 안보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구순하고 고문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그 사인조차 은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사로인해 고통 당해온 유가족들과 그 동료들은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 정권 하에서는 반드시 의문사는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93년 5월부터 '의문사 전면제조사 국회 청원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런 결과로 10만명이 넘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 캐나다 동포들의 서명과 93년 6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의 서명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2. 의문사의 전면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모든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사건 종결 처리된 '의문사' 사건이라고 해도 철저히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합니다. '의문사'사건은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억압적인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사건들로서 그 사건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동료를 잃었던 것입니다.

(2) '의문사'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국회내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6공 초기에는 5공 청산을 위해서 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 의문사는 5공청산특별위원회 내의 인권소위에서 다루어졌고, 청문회도 열리도록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 6공 하에서도 의문사는 근절되지 않았고, 다시금 그 수를 더해만 갔습니다. 국회내에 의문사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적이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의문사가 철저히 조사되고 다시는 이땅에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지난 3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서초경찰서 소속 형사 채학식·박찬식·최병일씨를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채학식씨등은 지난해 5월 29일 발생한 미군병사 쾨로저 살로이스 병장의 김국혜(53)씨 강간치상 담당 수사팀이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강간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미군범죄를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가 팬티와 팬티스타킹이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과 자정이 넘어 영업이 끝난 시간에 혼자 있는 피의자를 찾아온 점등 성폭행 혐의가 뚜렷한데도 단순히 폭행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항의했다.

특히 로저병장이 낸 항소심에서 채학식형사를 증인 심문하는 과정에서 사건초기 인지보고서를 통해 '성폭행의 혐의가 짙어 피해자의 질분비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다'고 보고했으나 의뢰사실을 반복하는가 하면 영동세브란스 병원의사에게 부탁했는데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감정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보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없는 강간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질분비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데,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증거를 인멸시켰고, 수사인지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의 질분비물을 채취, 감정의뢰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김국혜씨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담당검사들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에서 강간치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윤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묵살한 채 조검사가 어떠한 보강수사도 하지 않자, 하광호(서울형사지법 6단독)판사가 직권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검사는 '결심구형대로 7년을 구형해 재판부가 "이 사건은 법률에 의해 징역 15년까지 볼 수 있다"며 검사의 구형을 지지하는 뜻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에 당당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것이 인정된다. 폭행죄를 적용하되 이 점을 감안해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경 로저병장의 항소로 재판이 열렸는데 성폭행여부를 밝히기 위해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의 증인 채택으로 채학식형사가 나왔다.

(2면에 계속 ->)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박정기)는 4일 오전 11시 소개의원 이부영 의원의 91명의 의원서명과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 국제인권단체, 재캐나다 동포들의 서명을 취합하여 국회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공부문노동조합회의 출범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회의(위원장: 강희재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가 11월 4일 속리산 서당골 농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발족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11월4일자(279호) 행사안내 중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행사가운데 "폭행치사"를 "폭행치상"으로 바로잡습니다.

### ○ 오늘의 행사 ○

- △제65주년 학생의날 기념행사/나의참모과 나의의지로 함께 열거할 열린 학교  
홍사단 고등학생 아카데미 서울연합회  
오후 3시 홍사단 3층 대강당/1부 기념식/2부 문화행사/3부 댄스마당/☎743-5062
- △부패무능정권 규탄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대회/전국연합, 국민회의, 민정연, 전노대 등  
오후2시 탑골공원/☎747-43645
- △경실련 검찰권 운동, 이대로는 안된다/경실련  
오전10시 경실련 강당/☎766-5393,741-7963

### <알립니다>

- △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이사했습니다.  
전화:365-4016 팩스:365-4017  
주소: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
-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에 새 팩스가 생겼습니다.  
다. 팩스:793-4745

## 최태호 이교 의문사 갈수록 의혹 증폭 오늘 대책위 결성, 항의집회도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소장 안우영)에서 의문사한 최태호씨(11월 5일자 제280호 참조)의 의문사건 상규명을 위한 대책위가 오늘 결성된다.

최씨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안동 성소병원 영안실에서 재부검을 요구하며 장례를 거부하고 시신을 지켜왔다. 유족들은 최이교의 사건을 지역의 각 인권단체와 재야단체에 알려내고 서울의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국민주주의민중통일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 도움을 얻어 그동안의 가족대책위원회를 지역대책위로 전환하게 되었다.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는 안동지역 NCC, 전교조 경북지부, 안동농민회, 안동대 총여학생회, 안동택시노조, 민주당 안동지구당,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이며, 대책위 사무실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에 두고 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김재문 신부(목동 성당 주임신부), 이천우 목사(안동지역 NCC인권위원장)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한편,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쳐 실시된 검사의 현장수사에는 김형태변호사(천주교인권위)와 유족 4명(부모, 외삼촌, 외조부) 임회하였는데, 교도소측은 유족들의 요구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시마저 무시하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유족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의 현장수사에서 유족과 대책위측에서는 최이교의 키와 비슷한 사람으로 당시의 상황을 목격자 진술에 기초하여 재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교도소측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날의 현장수사는 오전

9시부터 있기로 하였으나, 대책위 변호사와 유족이 참가하는 것을 교도소측이 완강히 거부하여 이에 항의하는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때 유족이 들고 있던 비디오카메라가 부숴지기도 했다.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있을 교도소 앞 항의시위에는 유족, 대책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가족 박정기 회장(고 박종철 열사 부친)이 참석한다. 한편 유족이 요구하는 재부검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한교협인권위, 네번째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삼근 목사)는 6만여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재소자 겨울나기후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로 네번째이며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인권상황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재소자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교협 인권위에 의하면 교도소내에 겨울에는 월동용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동상이나 독감등 질병에 걸려 출소후에도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교도관들도 교도관 한사람이 재소자 4.1명을 담당하는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교협 인권위는 '재소자 겨울나기후원사업'을 통해 전국 38개 구치소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담요, 보온물통, 영치금, 성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성탄절과 설날에 보낼 예정이다. 모금기간 94년 11월 15일-12월 31일까지며 ☎ 764-0203로 문의하면된다.

## ◆인권간행물◆

### □분단조국의 희생양, 조작간첩(자료집)

-천주교조작간첩친상규명대책위원회(☎322-1774)  
· 주요내용:조작간첩사건과 일본사회(서준식)/이장형, 신규영,강희철,손유형씨 사례/사업계획안 등(42쪽)

### □유독가스누출참사 보팔을 잊지말자!

-인도보팔참사10주년기념 한국행사위원회  
· 주요내용:보팔을 잊지말자!(이중훈)/한국고엽제피해의 현황과 대책(임중환)/원전레이논 기계수출을 반대하며(박석운)/지금도 계속되는 온산병 문제(이지영)/ 화학공장 대형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김은희)(33쪽)

### □검찰권운동, 이대로는 안된다-경실련(☎741-7961)

· 주요내용: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권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석연변호사) 11쪽

### □정책토론회-민주노총, 무엇을 하나

-민주노총건설 추진위원회  
· 주요내용: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김금수)/민주노총 무엇을 해야 하나?(김유선) 57쪽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393-4662)  
· 주요내용:무의미한 고난과 하나님 생각(심광섭)/통일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박수미)/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국인 노동자 피친차'를 찾아서(박승복)24쪽

###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  
· 주요내용:신체접촉, 우리문화에서 어떻게 보아왔나(조옥라)/성희롱, 왜 권력의 문제인가(심희희)/성희롱, 왜 고용상의 성차별인가(조순경)/신체접촉, 왜 수인한도 밖인가(이은영) 46쪽

### □보도와 명예훼손-한국언론연구소(☎275-4932)

· 주요내용:언론자유와 인권(김동철)/명예훼손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 □한두레-마창지역 양심수 후원회(☎67-2075)

· 주요내용:긴급특집-고 임중호동지를 추모하며/임중호 동지 사망경위/나도 한마디-석방소감(김동현)/참교육의 현장에서-도덕성 상실 집단 중후군(김용택) 등 15쪽

### □우리네 아이들 10월호

-지역탁아소연합회(☎275-8505)  
· 주요내용:일하며 생각하며-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하며(정병호)/긴급진단2-어린이 폭력 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된다(문용린)/특집2-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안 등 80쪽

### □함께걸음 10/11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만나고 싶었습니다-구스노키 도시오 일본 전국장애 자해방운동연합회의 의장 (이태곤)/조집-흔들리는 '고용 촉진법', 비틀거리는 '장애우노동법'(전홍운)/한국특수교육100주년 기념 기력시리즈<8>-특수교육에 대한 공격적 임의 확대와 그 한계(김병하) 등 85쪽, 값2천원

### □철도형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교통환경연구소·한국화합민주당국회의원실(☎)  
· 주요내용:철도형 환경오염 실태/ 향후 개선방안 56쪽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 구국전위 안재구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구국전위」 사건으로 지  
 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사  
 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  
 울지방법사지법 합의21부  
 (주심 윤강렬판사) 심리러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  
 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  
 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  
 과 규약등을 통해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  
 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  
 건을 배포했고 수사차레  
 북의 지령을 받았으며 총2  
 억여원의 공작금을 받는등  
 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안씨는 79년 「남  
 조 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남민전)사건으로 구속되  
 어 80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 88년 대구교  
 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  
 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  
 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  
 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재완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  
 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

당과의 무관하다고 증명했  
 다"고 말했다. 반국가단체  
 임을 증명하는 것은 구국  
 전위 결성축하문밖에는 없  
 는데 이 역시 체보문에 따  
 른 것으로 성명불상의 반  
 국가단체구성원이 정화려  
 씨와 만나기 위해 입국한  
 사실을 안기부가 입국 10  
 분만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검거하지  
 않고 그뒤로도 4차례나 만  
 남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  
 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구  
 국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한  
 것에도 정화려씨등 많은  
 증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10여명의 회원으로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  
 다.  
 그리고 피고인 안씨가 보  
 낸 보고서는 조직적 차원  
 의 의결이라기 보다는 안  
 씨 개인의 견해를였을 뿐이  
 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국  
 전위의 결성축하문의 유일  
 한 증거인 체보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은 구성요건이 불충분하다  
 는 것이다. 나아가 "주체사  
 상을 추종했다는 이유만으  
 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

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  
 했다. 주체사상이나 주사파  
 들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흑백논리이며  
 경제인들이 북한의 주사파  
 들과 협력을 피하는 이때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재구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형구형에 열렬했다고  
 말한 뒤 차분히 준비된 원  
 고를 읽어내려 갔다. 안씨  
 는 "광명조직을 만들고 이  
 름을 구국전위라고 붙인  
 것일 뿐이며 결성축하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문건  
 은 조작되었고, 그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  
 다. 광명조직의 강령, 규약  
 등을 몇사람에게 보여준  
 것이고 사실과는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안기부,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혔으나 묵살당해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전적  
 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칠  
 순이 넘는 류낙진씨나 자  
 신을 믿고 심부름을 한 것  
 뿐인 정화려씨들에게는 관

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안씨는  
 "자신은 국가 반란이나 파  
 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남북분단을 청산하고 민족  
 공동체로 새사회를 창조해  
 나가자는 의도였음을 해아  
 려주길 바란다"며 최후진  
 술을 마쳤다. 선고공판은  
 11월 30일 오전10시.

### 최태호 이고 대책위 출범 재부검 요구 관철

최태호 이고 의문사진상  
 규명대책위(위원장 김재문  
 신부, 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안동교도소(소장  
 안우영)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재부검을 강력히 촉  
 구했다.  
 안동지역의 종교계, 재야,  
 노동자, 학생 조직이 망라  
 된 대책위 결성식을 함께  
 가진 자리에서 △법무부장  
 관의 공개사과 △교도소장  
 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  
 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안동  
 지청 변찬우 검사는 유족  
 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부검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1시 변  
 호사 입회하여 경북대 법  
 원에서 부검하기로 했다.

### ○ 오늘의 행사 ○

- △ 윤석양 이병 출소 환영회  
 오후6시/ 기독교백주년기념관 2층 그릴  
 주관: 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766-4979)
- △ 정책토론회-지방자치시대와 장애인교육  
 오후2시-5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 토론회 2-90년대 한국사회,지존파,사법정의  
 오후4시/이화여대 인문관 대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796-8364)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  
 제 일 128-10-131017 예금주-서준식  
 농 협 011-01-404581 예금주-서준식  
 국 민 015-21-0723-021 예금주-서준식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 최태호이교 재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 25일경 부검결과 나올 예정, 사망전 구타가능성 짚어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에 대한 재부검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광정식 박사(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의 지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부검에는 교도소속 직원, 유족, 오창대(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씨 등이 입회하였다 (<인권하루소식> 11월 18일자 참조).

이날 재부검에서 1차 부검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측두부 피하출혈과 가슴부분의 타박상 등이 새로이 발견되어 1차 부검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광 박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의사'(편집자 주-목을 매어 죽음)이고, 주요해부소견에서는 '목에 있는 의흔(편집자 주-목 맨 자국) 29cm, 설골 골절, 전두부, 측두부, 오른쪽 가슴 등 모두 10군데 찰과상 및 좌상(편집자 주-피하출혈, 타박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요해부소견에서 직경 3.5cm 크기의 간뇌부 종양이 있음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였다. 부검 결과는 오는 25일경 나올 예정이다.

한편 유족 중 이규정(최이교의 이조부)씨는 "재부

검 결과 몸 전체에서 타박상과 피하출혈이 발견된 만큼 이는 최 이교가 사망전에 구타당한 것이므로 구타자에 대한 수사와 지

휘감독소홀, 사인은폐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 단독 변신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리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의외적이 있었다. 이덕우변호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자료집의 극히 일부분만을 확대해석해 객관성을 잃고 있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학계에 의뢰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 판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변호사의 요구를 들어 감정의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의 범죄로 3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317호.

###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제 한국인노동자 24명이 낸 소송과 관련하여 "시급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 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임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병무청, 대학원생경력 양심수 군문제 해결약속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모임'(양군모) 회원 40여명은 19일 병무청 징집국장을 만나 지난 2월 합의한 병역문제를 22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 불이행 규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양군모에서 지적하고 있는 병무청의 '약속불이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시행령에 △징집면제 해당시기규정(89.3.25-93.2.24)을 두고 있어서 이전 행위자들에게 대해서도 고려할 것, △대학원 학력을 가졌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에 대한 병역면제, △복적생의 경우 29세까지 해당될 수 있도록 할 것등이다 (<인권하루소식> 11월 4일자 참조).

<이달의 주제 - 노동의 권리 >

가맹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로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ILO-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 최태호 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 최이교 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의 아버지 최종구씨는 22일 최 이교 사망전 구타당했다며 구타에 참가한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부검결과 나타난 좌측 머리의 출혈과 양쪽 정가이, 양쪽 무릎과 상치, 가슴과 등의 멍자국 등은 구타의 흔적이 분명하다"며 "최 이교를 구타한 성명불상의 경비교도대원을 색출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또 "부검결과 최 이교의 사체에서 구타, 가

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측에서는 구타행위자를 찾아내는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짓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이광협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 이교 사망과 관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안동교도소 최 이교 자살사건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문건에서 ▲ 85cm의 포승줄로 1백78cm 키의 최 이교가 1백57cm의 높이에 목을 매달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죽는 것이 가능한가, ▲교도소에서 맨 처음 자살에 사용된 포승의 길이가 85cm

로 발표했다가 검찰의 현장조사에서 1백10cm로 바뀐 경위는 무엇인가, ▲교도소에서는 최 이교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발견되

었다고 발표했지만 최 이교를 최초로 검안한 성소병원 의사 임호식은 군복 차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등의 문을 제기하며, "구타, 가혹행위자를 밝혀내는 일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 이교는 지난 8월 11일 입대하여 10월 15일 안동교도소 경비교도대로 배속된지 16일 만에 사망했다.

## 전모공개, 피해자배상 한 목소리

### 정대협 창립 4주년 144차 수요집회

국제법률가협회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특별보고서 이후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호계등, 정대협)는 23일로 4주년을 맞이하여 제1백44차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대 할머니, 여성단체 회원, 종교인, 취재진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대협은 성명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범죄의 전모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적 배상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위안부 해결없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집회는 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와 노래마음이 참석하여 한결 힘차면서도 숙연한 분위기로 어우러졌다. 원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전경의 저지로 30m 떨어진 곳

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시경찰청은 "일본대사관이 요구하여 전경을 배치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교협인권위원회 등의 주최로 의등인등특별심포지움에 참석하러 한국에 온 일본기독교협의회 관계자 야와타 아키히코(재일의국인 인권위원)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연대의 기초를 다졌다.

집회후 윤순녀 정대협 공동대표는 4년동안 정대협 활동에 대해 "민족과 여성 한으로 잊혀진 정신대 문제가 이제는 여성, 인권 운동으로 승화되어 전세계적인 인류의 문제로 인식되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게 하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 정대협 총무인 이미정씨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50여년전 인권침해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점과 여성, 인권, 민족운동이 밀받침되어 정대협 활동의 성과가 쌓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 『안기부 프락치에서 양심선언까지』

-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전모 비디오 테이프 판매중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씨 양심선언이  
여기 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개당 6,000원, 5개 이상 구입시 개당 5,000원씩  
구입문의처: 전국연합(747-4364, 5)

실가로 판매합니다

###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지난 94년 8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제 46차 인권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기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것은 결의안(resolution)으로서 「차별방지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 소위원회」에서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결정사항(decision)으로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린다 차베스(Ms. Linda Chavez, 미국)가 제 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신대 문제가 국제적으로 처음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 조사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린다 차베스 씨는 면담을 통해서 "95년 4월이나 5월 이주간의 일정으로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기초적인 1차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교섭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정부는 이미 공식적 방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해지며 필리핀 역시 정부가 초청할 수 있도록 요청중이라고 전해진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정대협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 보고관'인 라디카 코마라사미(Ms. Radhika Coomaraswamy)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제1차 총체적 보고서(95년 2월에 제출), 가정내 폭력을 다루는 제2차 보고서(96년 2월에 인권위 제출) 국가에 의한 폭력을 다루는 제3차 보고서(97년 2월 인권위 제출)에 군위안부 문제가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정신대문제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위

원회에서 미국의 교묘한 방해로 유산되었던 "특별보고자 임명"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

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 최내무장관등 경찰간부 15명 '불법감금' 피소 부경총련 범민족대회관련, 손해배상청구도 계획중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 연합」(의장 서광일, 부경총련)은 23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부산-경남 지역 학생이 경찰에 무더기로 강제연행된 사실과 관련,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개 경찰서장 등 모두 15명을 불법감금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24명이 낸 고소장에서 학생들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이 아닌데도 무더기로 강제연행해 불법감금하는 바람에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과 피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내무부장관과 경찰간부들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부경총련은 앞으로 내무부장관등을 상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 성모옥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올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공판이 23일 오후 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 (= 1면에서 계속)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제언을 존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 ◎ 서울지하철 구속수배철회와 대량징계분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 일시 : 8월 26일(금) 오전 10시 ~ 8월 27일(토) 24시
- 장소 : 대학로 써스퀘어 호프(전화 747-8778)
- 주최 : 서울지하철노조(전화 243-3321, 214-8490)
- 주관 및 후원 : 전지협, 서투노협, 전국연합, 전노대, 전지협 공대위, 공공부문노조, 3중단 대책회의, 각부문 전문노래패

### 제132차 정대협 수요시위

- 일시 : 94년 8월 24일 12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전화 576-7128)

### ◆ 공 판 안 내 ◆

#### □8월 24일(수)

-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 □8월 25일(목)

- 박중호의 2, 특수공무집행방해, 11시 30분, 319호, 1회

#### □8월 26일(금)

-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항소심
-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0분, 321호, 속행
- 박한상, 존속살인등, 2시, 319호, 4회

### 전교조 새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69.9% 투표에 96.9% 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위해 일선 현장교사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일치를 모았고 “전교조가 앞장서서 실천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새로 당선된 정해숙 제 6대 위원장은 “전교조가 40만 교사들에게 깊숙히 뿌리 박으면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1만 4천여명의 조합원중 9천9백54명이 참여하여 69.9%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정해숙, 이부영 당선자는 9천6백31명의 찬성표를 얻어 96.9%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전국 15개 지부에서 인천을 제외한 14개 지부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 최이교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위해 상경

「최태호이교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문등, 대책위)는 17일 안동 문화회관에서 '안동교도소 최태교 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최태호이교 사망의 의문점과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대책위는 20일 서울로 상경하여 국회를 방문하고 최이교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방에 분리수용되어 있고 독서는 물론 수용생활에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매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변협은 “안개구씨는 미결구금 상태에서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 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구금자의 처우, 보호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정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 교도소측은 “규정상 사형이 구형된 자등 중죄인에게 한하여 이와같이 특별처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변협은 밝혔다.

### 월든 벨로 박사 초청 간담회

-한국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

- 일시 : 12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탈제 : 한국경제의 전망과 WTO, APEC의 의미 (월든 벨로, WALDEN BELLO)
- 토론 :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이성섭(숭실대, 무역학)/김인철(성균관대, 경제학)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누리신문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류은숙(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인권선언에서 표명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문헌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이상'이나 '열망하는 최종목표'인지는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보편적이지도 않고(모든 인간이 아니라 노동자, 빈민, 장애인 등 특정범주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법적이지도 않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와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사회적 권리가 사법심판의 대상인가의 문제이다. 즉, 권리가 법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면 전혀 권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인 Alston교수는 “실체법학파에게 있어서는 공식적인 재판회부가능성이 권리의 필수불가결한 속성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문헌상의 권리일 뿐인가?

법적 청구권의 개념은 그 청구권자가 법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보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는 때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청구, 즉 포함할 수 있고, 적절한 자원에 대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권리는 단지 불완전한 재판확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에 대한 이런 협의의 해석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있어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 즉, 이를 협소하게 재판과정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재검토(review)과정의 문제, 시행(enforcement)과 성취(implementation)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검토 과정에서 다루는 시행과 성취의 판단은 당사국과 국제적 영역 둘다에 존재하는 규범과 기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사법심사가능성'의 관점보다는 '협의(consultation)'의 과정이, 특히 국제적 영역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보고절차와 그에 따른 정부보고서의 심의와 평가, 권고등으로 현실화되어 있다. 결국, 권리에 있어 '현재의 실현가능성'과 '충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의 영향 때문에 권리는 현재 실현가능한 것이고 가능해야만 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된 것이다.

둘째,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간의 구별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자유권을 보호하는 데

# 연말, 연초 인권소식

##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일본 도쿄에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들의 송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회」(회장 최일수)는 김인서등 3인 장기수송을 고향인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집회를 갖고 지난 12월 27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 앞으로 「민족의 화해, 단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시급히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요구 목요일집회

「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대표 서경순, 민가협)는 지난 12월 29일로 '44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을 위한 제67회 목요일집회'를 가졌다. 민가협은 "현재 4백35명(12월16일 현재)의 양심수가 감옥에 갇혀 있으며 44년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장기수가 26명에 이르고 70세이상의 고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령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기업은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우회, 전교조등은 지난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검찰이 여성간의 차별론을 내세워 여사원을 채용할 때 용모를 제한한 대부

분의 기업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용평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엄매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고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등 항고

「최대호이교 의문사 진상 규명 안동지역대책위」(공동대표 김재문)와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지난 94년 11월 안동교도소 경비대원과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지청(검사 변찬우)에 고발, 13일 불기소 결정된 것에 불복하여 지난 12월 29일 항소하였다.

대책위는 "검사의 수사결과는 그동안 가족들과 대책위에서 제기한 사망추정 시간 조작, 구타흔적, 자살 동기등 의혹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올바른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안동교도소 자체수사가 그랬듯이 검찰수사 역시 의혹을 덮어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종렬의장 긴급구속, 시자제 사전 봉쇄의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공동의장 이창복등 '3인)은 지난 달 30일 광주전남연합 오종렬상임의장(시의원)이 긴급구속된 데 대

해 지난 12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야 민족통일운동 인사의 지자제선거 출마 및 당선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수법"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지난 8월 열린

범민족대회 참가 사실만으로 오의장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 남용은 물론 95년에 전개될 민주통일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밝혔다.

##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여연

지방자치선거를 맞아 여성후보의 당선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8 여성의 날 제 11주년 한국여성대회를 '남녀 유권자 한마당'으로 개최할 계획.

사회보장관련법등에서 여성차별에 관한 내용을 여론화시키고 남녀평등한 사회보장관련법을 확보해 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고용불평등 관련사안을 찾아내고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판례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여성불평등 사안을 여론화시킨다.

분단 50주년을 맞아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일본잔재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축과 평화에 대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 □정대협

울해도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추진사업과 일상사업으로 수요시위가 잡혀있다. 상반기의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27-3.1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3.13 UN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정을 반대하는 국내외 서명전달식과 미주지역 정대협등과 함께 대규모 행사로 가진다.

4. 5월경 UN인권위 특별보고관 린다차베즈, 쿠마라수와미씨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군위안부 할머니 초청  
8.30-9.15 북경여성대회 기간중 정신대 할머니 증언(9/3), 한국의 날 행사(9/5), 필리핀 군위안부 대책위와 정대협 공동으로 국

제포럼 개최(9/6), 보스니아 여성들과 전쟁중 일어난 여성피해에 관한 포럼(9/7),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여성문제 포럼에 이어 여성문제에 관한 대규모 국제포럼 개최(9/8).

### □성폭력상담소

95년 활동계획 목표로 성폭력상담소는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와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세웠다. 내담자 지원체계 활성화로 △일반상담, 위기상담, 피난처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정착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등을 할 예정. 또 △국민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성교육 △청소년대상 비디오프로그램 제작준비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위한 성교육 및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등도 할 방침.

###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는 △회원단체 연대강화, 미군범죄 신고센터 확대강화 △미군범죄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미군범죄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의 대중화 △후원회의 확대 강화로 골격이 갖춰져 있다.

1-2월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위한 조사단 구성, 지역방문등 준비작업/미군범죄 다큐멘터리 제작  
3-4월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사회여론화 / 한미행정협정 자료집 발간  
5-6월 민족자주학교 개최  
7-8월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인권하루소식> 편집인이 95년 1월 5일부터 박래규으로 바뀌었습니다.

# 인권협 킹평화상 수상 반대성명

## “킹목사 정신 심각히 훼손” 주장

민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등 9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고영구 변호사)는 23일 “김영삼대통령의 킹평화상 수상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협은 성명서에서 “김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백68명(94년 12월6일 현재)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고, 유엔인권

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가 개정권고한 제3차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 수배가 계속되고 있는” 등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은 인권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며 킹목사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 인권공개강좌,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등 계획 엠네스티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2일 총회를 갖고 95년 사업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사업을 살펴보면 2, 5, 8, 10월 인권공개강좌를 개설하며, 3월에는 북경여성대회기념캠페인과 ‘여성의 날’ 캠페인이 각각 1일과 8일에 잡혀 있다. 5월에는 한국난민법 관련 소책자를 발간하고 9월 1일부터 한국난민법 활동에 들어간다. 6월에는 아동 권리 책자를, 8월에는 여성인권 관련 책자를, 12월에는 「인권이란」 증보판을 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1-3월 한국사형제도 폐지 캠페

인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미국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펼친다. 국가별 캠페인으로 터키, 이라크, 시리아 캠페인들이 준비되어 있다.

## 옹역직원 동원, 노점상 생계위협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 80여명의 싸움이 지난 12월4일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21일부터 남성시장에 서울시경 1개중대와 동작구청 직원 80여명, 옹역직원 40여명이 상주하며 노

점상의 장사를 막고 있다. 23일 노점상측은 계속 장사를 해갈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권하루소식 329호 참조>).

##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성기 변호사(54)를 임기 2년의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당직변호사제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인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변호사 중 재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인단체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거 부정과 총선거부를 주장하며 신민당사에서 농성 한 서울대생들에게 무죄를

선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다시 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재임용돼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지냈고, 86년부터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법사위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금혼 고수를 위한 청원’ 등이었으나, 이날 의문사 관련 청원만 청원심사소위에 넘겨졌다. 그러나, 국회청원심사소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유가협은 지난해 11월 4일 박계동 의원(민주당)등 9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과 10만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 ○ 공 판 안 내 ○

□1월 24일(화)

· 김태성(국보법), 2시, 425호(4단독)

□1월 25일(수)

- 윤보현(강도살인등), 2시, 302호(2부, 2심)
- 한은술(국보법), 10시30분, 311호(21부), 1회
- 김병삼(국보법), 11시10분, 311호(21부), 1회
- 최일봉(국보법), 4시, 421호(8단독)
- 박현용(국보법), 10시, 424호(9단독)
- 권오창, 신경길(국보법), 2시, 각 4회·1회(22부)

□1월 26일(목)

- 김기환의 5명(강도살인등), 2시, 309호(3부, 2심)
- 윤덕산(강도살인등), 10시, 404호(5부, 2심)
- 전계순(국보법), 형사지법, 오후2시, 418호(4부)
- 김형욱(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11시, 418호

□1월 27일(금)

- 신광수의 1명(국보법), 11시, 418호(1부)
- 김기현(국보법), 2시, 422호(5부)
- 고영국(국보법등), 4시, 424호(10단독)

## <인권하루소식>이 숨이 찹니다

큼직한 송신비,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 비용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은 늘 숨이 찹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인권하루소식>을 살려주고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구독료는 1만원~3만원 사이입니다.)

구독료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는 서둘러 주시고, 이번 달 구독료는 종전대로 은행에 가서서 아래의 구좌로 납부해 주십시오.

### 계좌번호

예금주: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조선일보>

제 목 : 정부, 11월말이전에 고문방지협약 가입 신청

정부는 늦어도 11월말 이전에 국제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고문방지협약은 가입신청서 접수후 30일 이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말 이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외무부에서는 모든 검토가 끝나 있으며 다만 법무부와 내무부의 의견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회의에서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연내 가입 방침을 천명했다.

발행일 : 93/09/27

제 목 : 법원, 검사·수사관의 구타등 고문행위 첫 인정

\*\*\* 서울민사지법,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 \*\*\*

검사와 수사관 8명이 검찰청사내에서 피의자에게 구타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고박중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씨 고문사건,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등 일련의 고문사건이 지금까지는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데 비해 이번 사건은 검찰청사내에서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9년 10월 사기등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검사(41/사시 19회/현재 수원지검 강력부장) 방에 불법연행돼 이치균 수사관 등으로부터 30여시간의 가혹행위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가 무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5/택시기사/서울 성동구 암사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89년 10월 23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김씨를 조사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구타를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김씨가 주장한 물고문과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김씨는 22개월간의 이번 사건 소송에서 "당시 검찰이 보혐료를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사건 일제단속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9개월만 지나면 장기근속 무사고운전기사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돼 있던 나를 지목, 30여시간동안 4개의 조사실을 끌려 다니며 3차례의 겨자씨 물고문(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운 뒤 겨자물을 붓는 고문), 통닭구이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3차례나 실신한 끝에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9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 89년 10월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검사에게 연행돼 사기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행일 : 93/09/24

제 목 : <아침논단> 검사와 판사...충북

얼마전 청와대 사정담당 비서관이던 모 변호가가 거액의 수입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보다 앞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때엔 검찰과 사법부 인사들의 재산이 너무 많다 해서 일반국민들의 의구심을 크게 산 일이 있었다.

작년말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포로된 부산기관장들의 모임에선 특히 전직 모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빈축을 샀다. 그것은 한 나라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의 어휘선택력(내용도 내용이지만)이 어떻게 시중의 잡매나 다름없이 그렇게 낮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실명과 질책이었다.

또 얼마전 전직 모검사가 펴낸 책에서는 아직도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해서 고문에 매달리는 검찰의 전근대적 관행을 폭로해 읽는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여기엔 그동안 검찰이 권력자들의 '청소부' '망나니' 노릇을 해왔다는 통렬한 자기비판도 곁들여 있어 더욱 분노심을 자아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 더욱 성행하는 말이 됐다. 모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사회지도층 신뢰도 조사에서 검사와 판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성직자 선생 군장성보다도 훨씬 떨어졌고, 심지어는 사이비 언론인이라 해서 한참 지탄받던 당시의 언론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는 크나큰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돼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떠받들어져야 한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성직자보다 더 우위여야 하고, 지적으로는 선생보다 더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의 행태가 단순히 빈축을 사는 것을 넘어 지탄받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단순히 떨어지는 정도를 넘어 무너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명백하고도 간단하다. 법관 임용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법관은 사법시험을 통해서 뽑는다. 이 고시만 합격하면 곧 법관이 되는 길이 열린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하던 꼭 그대로다. 50년전, 심지어는 60-70년전 하던 그대로, 하나의 모범답안지가 있어서 그 모범답안지에 가깝게 답안지만 쓰면 합격증이 나온다. 그것도 불과 몇권의 책을 몇년이고 걸쳐서 달달 외다시피 암기만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내는 그런 시험방식이다.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웃음거리가 된다. 하물며 지적 창의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학에서라. 더더구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하나를 수행하는 법관을 뽑는 데서라.

오늘날 한국의 법과대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가장 엉뚱한 방법으로 가려내는 시험이 곧 사법시험이다.

현대사회의 3대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교수와 의사와법조인으로 꼽혀진다. 전문인의 기준은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소 5년이상 공식교육을 더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유독 법조인만이 이 기준에 미달해 있다.

교수는 박사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고, 의사 역시 대학 6년을 마치고도 5년 이상 더 교육받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오직 법조인만이 더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법관이 되고 난후 부터다. 법관으로 임용과 동시에 그 업무의 과다성에 의해 지적 수련을 쌓을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20대 어린 나이에 서부터 일반직업인 40대에서도 받기 어려운 대우와 경력상의 우대를 받는다.

그리고 늘 대하는 상대는 뛰 하나 배울 것이라고는 없는 강간 살인 강도 폭력 방화범등 일탈자들이다. '싸우면서 닮는다'는 옛말대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을 수 없고, 지적으로 황폐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바로잡는 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부를 4년동안 열심히 한 대학졸업자들을 처음

부터 다시 뽑아서 3년이상 법률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년간의 실무기간을 거쳐서 법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전문인이 되도록 공식교육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도 전문인이 되는 길은 없다. 2천년전에도 '사이불학즉태'라 해서 공식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하는 것을 가장 위태롭다 했다. 첨단지식을 생산해내는 오늘날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법과대학은 무엇을 하는가. 사회는 법관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좋은 법상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 훌륭한 법학자를 양성해내는 기관을 요구한다. 법과대학은 지금까지의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연세대교수/정치사회학>

발행일 : 93/09/07

제 목 : 서울고법,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에 유죄선고, 법정구속

\*\*\*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 경감등 4명 \*\*\*

지난 85년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를 고문한 혐의로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해 재판부에 회부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전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와 함께 전원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2년이 선고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 김수현피고인(59)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감금)및 형법(독직폭행죄)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영두피고인(55/전 경남)에게 징역 2년을, 백남은(58/전 경정) 최상남 피고인(46/전 경위)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후 역시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고문 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발생 7년 11개월만에, 고문 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 된지 4년 3개월만에 사실심을 모두 마치고 대법원의 법률심만을 남겨놓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근태씨 및 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교도관등 관련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때 실제로 고문을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김씨를 고문하게 된 동기 및 고문과정, 공직에 있을 동안의 업적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설득력은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실형을 선고한 이상 사실심이 마무리되는 항소심에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등은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몹시 충격을 받은듯 고개를 떨구었으며, 방청석에 와있던 동료경찰관들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5년 9월 서울대 민주위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청련 의장이던 김씨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88년12월 서울고법에 김씨와 변호인들이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동안 김창국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맡아 재판을 진행해왔다.

김창국변호사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후 "고문은 비록 밀실에서 자행되더라도 언젠가는 역사앞에 밝혀지게 마련"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교훈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당시 고문사건과 관련해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발행일 : 93/08/24

제 목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항소심서 전원 법정구속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9) 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전원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2년이 선고된 김수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감금) 및 형법(독직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징역 3년-징역 1년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근태씨 및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실제로 고문을 당하지 않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등에 비춰, 피해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발행일 : 93/08/23

제 목 : 박갑동씨, 동경서 시베리아 벌목장 고문형구 폭로

남로당 출신으로 북한에서 망명한뒤 반복한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갑동씨(73/조선민주통일국구전선상임의장)는 16일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의 벌목장에서 쓰고 있는 족쇄와 비슷한 고문형구를 폭로했다.

박의장은 특히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인권유린이 수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탈주에 대비해 감시가 철저히하며 탈주하는 노동자는 도끼 등으로 즉결처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장은 이날 일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베리아의 체코도민 벌목장에서부터 탈출한 한 북한노동자(36/신변안전상익명)로부터 입수했다면서 탈출 등 규정을 위반한 노동자들에게 채워놓는 이 형구를 공개했다.

이 고문형구는 두꺼운 철사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가 45-50cm로 양쪽에 지름 18-20cm 가량의 동그란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양다리에 채운뒤 밑부분을 열쇠로 잠근다는 것이다.

박의장은 이 고문형구를 이용해 벌목장의 북한 당국은 탈출자가 움푹달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봉대로 다리는 물론 머리와 목 등을 감은뒤 작업중 다친 환자로 위장시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벌목장밖에 있는 상점 등에서 한국산 비누와 치약 등을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한국의 간첩으로 몰려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이 노동자의 증언을 인용해 전했다.

박의장은 지난 7월부터 모스크바와 타슈켄트, 알마아타 등 구소련지역을 여행할 때 이 노동자가 소문을 듣고 밤에 자신을 찾아와 벌목장의 인권유린에 대해 말한뒤 이 고문형구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의장은 또 이 고문형구를 국제인권단체 등에 제시해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

겠다고 밝혔다.

발행일 : 93/08/16

제 목 : 고 박종철군 유족에 1억7천만원 배상판결

\*\*\* 서울고법, 가족들의 '신원권' 처음인정 \*\*\*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4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박군의 유족들에게 1십보다 4천만원이 많은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경찰관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만큼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 박치원 치안감, 유정방 경정 등의 진상은 폐행위와 관련, "가족중 일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때는 법 절차에 호소,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전제, "따라서 강 전치안본부장 등 경찰관들의 진상은폐 행위는 박씨등 유족들의 신원권을 침해 "정신적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등 유족들은 종철군이 지난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구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된뒤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 등을 당해 숨지자 지난 87년 4월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강 전치안본부장등은 박군이 숨지자 이틀뒤 기자들에게 "탁'치니 '억'하고 숨졌다"고 허위발표를 하는 등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발행일 : 93/07/15

제 목 : 92년은 "인권 대재앙의 해"...110개국서 고문 자행

### 국제사면위 보고서...소말리아-구유고서 수만명 피살 ###

소말리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학살, 난민증가, 110개국 당국에 의한 고문자행 등으로 지난 92년은 인권면에서 "대재앙의 한해"였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8일 한 보고서에서 말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이같이 밝히고 전세계 국가 대부분이 "인간의 생명을 놓고 정치놀음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사면위는 소말리아와 전유고 공화국에서 살해당했거나 실종된 남녀, 어린이들은 수만명으로 인간 학살은 가히 가공할 만한 수준이며 차드, 중국, 이라크, 라이베리아, 페루, 스리랑카 등에서도 인권 유린 실태는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국제사면위는 세계 161개국 중 양심수가 존재하는 나라는 62개, 정부가 고문을 허용하는 나라는 110개이며 이중 45개국이 반정부 인사나 문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사면위는 또 인권을 침해한 나라가 동맹국일 때는 침묵하고 적대국일 때는 맹렬히 비난하는 이중성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국인 중국, 터키, 멕시코 등에 국제여론으로 압력을 넣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해 전유고공화국에서 난민 수백만명이 발생하고 미얀마, 베트남, 소말리아, 수단, 예멘, 아이티에서 국민의 계층을 막론하고 명명자가 속출해 난민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해 인권 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 이집트, 알제리, 이스라엘 점령지 등 중동의 정치 종교적 폭력증가 ▲ 인도 경찰의 피의자 강간 증가 ▲ 소말리아 파벌들에 의한 민간인 수천명 학살 ▲ 타지크 전쟁중 민간인 2만명 사망 ▲ 31건으로 크게 늘어난 미국내 사형집행을 들었다.

대륙별 비교에서 유럽은 보스니아 내전과 구소련 공화국들의 상황악화로 최악의 인권지대로 지적됐다.

아프리카는 잇따른 민주화 일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여전하며 아시아도 특히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은 이란, 이라크에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등 여전히 고문지역으로 남아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과테말라 등에서 정규군, 경찰과 더불어 '암살대'(데스 스쿼드)가 계속 활개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대륙 전역에서 최소한 3천7백명이 약식처형됐다고 국제사면위는 폭로했다.

발행일 : 93/07/08

제 목 : ~~김근태씨에 고문 배상금 지급판결... 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용웅부장판사)는 7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대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5년 9월 당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수현경감(59) 등 수사관 4명으로부터 수차례 물고문을 당했으며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4천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국가는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2년의 실형이 구형된 김경감 등 4명의 경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 심리로 있을 예정이다.

발행일 : 93/07/07

제 목 : ~~한외무 세계인권회의서 연설~~

한승주 외무장관은 15일 오후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권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은 신의교정책 발표에서 인권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한국은 인권보장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고문방지협약에 올해안으로 가입하고 인권관련 모든 협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인권회의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가의 특수상황이 그 국가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서 지역적 국가적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나 역사는 특수상황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나 다른 국가와 지역의 인권문제에 대한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는 민족주의라는 또다른 강력한 감정을 촉발,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내 다양한 인권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대량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엔에 인권고등판무관을 설립하는 등 유엔인권향상활동의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권증진방안에 관해 한 장관은 정보의 자유화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지적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국가가 지역과 세계질서에 통합되면 될수록 그 국가가 인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북한을 비롯한 폐쇄국가를 개방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와함께 "우리는 인권증진과 보호에 개인의 용기와 희생이 근본적인 추진력을 알게 됐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개인과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야 하나 인권보호와 증진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북한에서도 백인준 최고인민회의부의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 이날 저녁 기조연설을 한다.

발행일 : 93/06/15

제 목 : 미국, 인권유린 21개국에 군사지원.... 국제사면위 비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8일 미국이 지금까지 반체제인사들을 고문하거나 감금하는 등 인권 유린을 일삼아온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전세계 21개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왔다면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그동안 대대적인 인권탄압을 자행해 온 수많은 국가들에게 군사훈련 및 자금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지원은 민간인과 정치범들을 제거하는데 악용될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매년 18억달러 및 13억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고 있는 미국의 최대 군사지원 수혜국인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2개국의 인권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양심적인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거나 학대해 왔으며 특히 이츠하크 라빈 총리내각이 출범한 이후 점령지 등의 인권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훈련 및 경제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강경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가옥을 파괴하는 사례가 금년초부터 부쩍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어 이집트도 회교 원리주의자들을 초법적으로 다뤘으며 구타나 거꾸로 매달기, 머리나 성기 등에 전기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밖에 바레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엘 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포르투갈, 세네갈, 태국, 필리핀, 튀니지, 터키 등 19개국도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아가며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군사지원과 인권탄압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비밀리에 집행해 온 국제군사-교육 훈련 명목의 군사지원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엘 살바도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의 군사지원이 인권탄압에 수년동안

악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리들은 대부분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의 저명학자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일본국제포럼'은 8일 미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인권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비야자와 기이치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클린턴 미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갱신여부를 인권문제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일 : 93/06/09

제목 : ~~4개 인권단체, 6공청분회 개최 요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교협)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등 4개 인권운동 단체는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6공이래 발생한 인권탄압 사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6공인원비리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각 참여 단체별로 ▲이철규, 이내창 의문사 사건 ▲안기부의 시국관련 고문사건 ▲보안사(현 기부사)의 인권 탄압사태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작성 이달말께 국회 청원때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주중으로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요청서를 정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또 이들 단체는 광범위한 인권비리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이날 한교협 인권위 사무실에 신고전화(764--0203)를 개설했으며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행일 : 93/05/03

제목 : "중국정부가 고문 목인"... 앰네스티 성명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적 인권옹호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은 16일 중국정부가 중국내 교도소와 수용소에서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는 고문을 보고도 못본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북경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서 "고문이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문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정부는 고문사태를 줄이는데 필요한 근본적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오는 22일 제네바에서 유엔 고문금지협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에 고문방지에 관한 보고를 제출 하도록 돼있다.

앰네스티는 중국이 지난 88년 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중국 국민들이 고문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조치의 이행에 관한 이 위원회의 질의에 회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중국의 지난 92년 고문사태에 관한 보고를 발표한 앰네스티는 이날 이 인권단체가 최근의 몇해동안 접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수용소에서 고문이 풍토병처럼 되고 있으며 오늘날 고문사태의 범위가 10전보다 더욱 광범하고 피수용자들은 빈번히 보다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범죄와 정치적 반대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벌인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중국정부에게 유엔 고문방지협정이 준수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이 협정 22조에 따라 고문에 관한 진정을 유엔 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발행일 : 93/04/16

제 목 : 강민창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문치사은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2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소견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과 관련, 기소됐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강피고인에게는 황박사에게 이같이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때 강피고인은 사건당시 치안본부장으로서 관련 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박군의 사인을 끝까지 '심장쇼크사'로 조작, 은폐하려다 신문보도등으로 더이상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뒤에야 수사를 지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행일 : 93/04/02

제 목 : 경찰청, "이근안경감 검거에 총력" 지시

경찰청은 30일 전국경찰에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 이근안경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보낸 전언통신문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를 지양하고 친-인척과 동창 등 연고지 별로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해 4월 월례보고때 그 명단을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친-인척과 동창생들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전국의 사찰과 암자, 숙박업소, 역-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재야운동가인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잠적했었다.

발행일 : 93/03/30

제 목 : 북한, 이인모씨 송환후 대대적 선전 공세

북한은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의 송환과 관련 판문점을 거쳐 평양 도착까지의 송환실황 중계를 반복 보도하는 가운데 <김일성-김정일의 은덕>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 등으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당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에서 이인모씨를 <신념과 의지의

화신> <통일 영웅>으로 찬양한데 이어 대남선전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이씨가 한국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고문과 박해를 받아 순신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종신불구자 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 제하의 평양방송 논설을 통해 이씨의 송환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과 의지의 승리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과시"라고 주장하면서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의 생은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 조국과 더불어 영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일 <이인모동지의 귀환은 온겨레의 기쁨> 제하의 평양방송 논설에서도 김정일과 이씨의 딸간의 서신교환 사실등을 상기시키면서 이씨의 송환은 김일성 김정일이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셨기 때문"이라고 선전했다.

이 방송은 또 이인모씨를 김일성의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은 <조국이 낳은 참된 아들>이라고 찬양하고 "이인모동지가 걸어온 생의 길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북한주민들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사회주의 고수를 촉구했다.

발행일 : 93/03/20

제 목 : 서울지검, 이근안 경감 검거 총력전 ... 특별 전담반 구성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반드시 검거하라."

서울지검은 한달전 특별검거전담반을 극비리에 편성,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4년3개월째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5)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0일 사건을 전면 재수사에 착수, 수사1과 수사관 20명으로 특별검거전담반을 구성하는 한편, 수사기록과 이씨의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자료에 대한 정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담반은 특히 이씨의 후처인 신모씨(48)와 막내아들(18)이 살고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주소지와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장남(34), 경기도 안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차남(31)등 직계가족과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인척 30여명의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반은 또 이씨가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 착안, 전국의 유명 은천에 정보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난달 말에는 "변장을 한 이씨가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근교의 10개 골프장등에도 현장 잠복조를 배치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배를 전후해 '이조웅'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가 성형수술을 한 다음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제3차 행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거반이 연고지 등에 현장잠복, 또는 정보원을 투입하여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아직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이씨가 분명히 살아서 국내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확신이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씨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민정부 출범에 때맞춰 '용팔이 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구속에 이어 이씨 검거에 나선것은 5공시절의 대표적 인권탄압사건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배일에 가려졌던 가혹행위의 실체와 함께 이씨의 도피를 돕는 비호세력이

있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이씨의 장기간 도피생활은 비호세력의 도움없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70년 경찰에 투신한 이씨는 84년 경감승진과 함께 경기도경公安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김근태씨 등을 가혹하게 고문한 혐의(독직폭행 등)로 88년 12월 24일 검찰에 지명수배됐다.

이씨는 수배직후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직위해제됐으나 검경이 초동단계에서 이씨의 신병 확보조치 하지 않아 술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었다.

발행일 : 93/03/16

제목 : 박종철군 고문치사관련 경관 3명 징유 판결...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66)등 3명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대공수사 2단 5과장 유정방(54), 전 대공수사 2단5과장 2계자 박원택(52) 피고인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을 고문치사케 한 조한경경위 등이 검찰조사에서 '박처원피고인 등이 범인을 축소-은폐-도피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이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며 진술 할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만큼 박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조경위등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했다라도 검찰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1월 당시 박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과 5명에 의해 물고문을 당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고문에 가담한 경관을 2명으로 축소-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발행일 : 93/02/27

제목 : 김근태씨 고문사건 항소심 14차공판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7)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5년-징역 2년씩이 선고됐던 김수현경감(58)등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항소심 14차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고문 피해자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당시 부당하게 불법연행을 자행했었다"며 "지금도 그때 당한 고문으로 인해 날짜가 흐리거나 비가 올때는 몸이 쓰리고 아프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 및 이 사건 특별검사 김창국변호사의 신문이 끝난 뒤 피고인들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하자 "피고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며 1심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음공판은 오는 3월 8일 오후 2시.

발행일 : 93/02/15

제목 : "권두영씨 고문에 의해 타살" 주장

북한은 17일 전민중당 고문 권두영씨의 자살에 대해 이를 고문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사죄를 요구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측이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을 조작한 후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고 억지 자백을 시키려고 고문을 가하는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권두영의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고문과 정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6공 말기의 전을할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측의 정권안보, 남북대결 등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변하고 "북과 남의 우리 인민은 이러한 죄행을 절대로 방관시하거나 스쳐 지날 수 없다"면서 남한 조선노동당사건과 자살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고백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발행일 : 93/01/18

제목 : ~~전민중당 고문 권두영씨 구치소서 자살~~

\*\*\* ~~간첩단사건 연루... 내일 결심공판 앞두고~~ \*\*\*

김낙중씨 등이 연루된 간첩단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 고문 겸 평화통일연구회 운영위원장 권두영씨(64)가 14일 오전 7시20분께 수감중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 구치소내 독방 화장실 창틀에 숙옷 하의로 목을 맨 채 신음중인 것을 교도관이 발견, 즉시 안양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권씨는 이 사건과 관련,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1심 결심공판정에 출정키로 돼있었다.

구치소측은 "평소 약간의 우울증세를 보이던 권씨가 13일 변희은 가족들로부터 '김낙중씨 사건과 관련, 간첩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심금섭씨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권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 아침점호때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김낙중씨와는 별도로 북한측에 포섭돼 1차로 지난 90년 11월 5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12일동안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어 지난해(4월 28일-5월 9일)에도 북한을 몰래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와함께 2차 북한방문때 대통령선거에서 앞서 해체된 민중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정당을 결성하겠다고며 50억-60억원의 활동비 지원을 북한측에 요청, 이중 2만달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었다.

발행일 : 93/01/14

제목 :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 ~~서울고법, 살인혐의 피고인 3명에 무죄선고~~ \*\*\*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이 "참고인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용웅부장판사)는 19일 유홍가의 이권을 둘러싸고 술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광웅피고인(31/상업/전북 김제시 요촌동)등 3명에 대한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문에 의한 피고인들의 자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피고인의 경우, 폭력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함피고인의 하반신에 심한 태자국이 있었다는 동료 재소자의 진술 ▲함피고인이 수감중 통증을 심하게 호소, 교도소 의무실에서 약을 타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함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현장에서 함피고인 등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유력한 증인인 송종욱씨(22/술집종업원)가 사건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 성동구치소에 폭력혐의로 수감돼 있었던 사실도 밝혀진 만큼, 함피고인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함피고인 등은 조직폭력배 '성산파' 두목 정필영씨(32/수감중)가 지난 89년 12월20일 전북 김제시 요촌동 '고가 림살롱'의 경영권을 빼앗기위해 림살롱 주인 박모씨(당시 35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주인 박씨의 팔과 어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 붙잡혀 구속기소됐었다.

함피고인 등을 기소한 서울지검 강력부 박성식검사는 이와관련, "조사당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검사가 받아낸 송씨의 참고인 진술이 거짓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조사및 1심 재판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송씨를 위증혐의로 처벌하기위해 소재지에 수사관을 급파했으나 송씨는 이미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일 : 92/12/19

제 목 : 인권침해 피해자 국가상대소송 대부분 승소

수사시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측이 대부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8년이후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11건으로,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기무사 상대 소송 1건을 제외한 10건 모두 원고측이 승소했다.

소송 대상기관별로 면 경찰상대 소송이 7건으로 자장 많고 안기부 2건,

검찰.기무사 각 1건씩을 나타냈다.

또 소송내역별로는 경찰상대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치사 1건 \* 변호인 접견 거부 1건 \* 피의자 고문 2건 \* 피의자 폭행 2건 \* 경찰서 대용감방 수감중 사망 1건이며, 안기부의 경우 \*변호인 접견거부 1건 \*불법감금 1건 이고, 검찰은 불법감금,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재판진행중) 등이다.

발행일 92/10/19

목차

검찰과 수사관 등이다. 경찰상대에... 폭행으로 인한 치사 1건 \* 변호인 접견 거부 1건 \* 피의자 고문 2건 \* 피의자 폭행 2건 \* 경찰서 대용감방 수감중 사망 1건이며, 안기부의 경우 \*변호인 접견거부 1건 \*불법감금 1건 이고, 검찰은 불법감금,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재판진행중) 등이다.

검찰부는... 29년 10월 10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검찰부는... 29년 10월 10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검찰부는... 29년 10월 10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발행일 92/10/19

한국일보

제 목 : 유엔50주년 한국위원회 발족

내년 유엔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계인사로 구성된 <유엔50주년 기념 한국위원회>(위원장 김경원사회과학원장)가 8일 공식 발족됐다.

한국위원회는 8일 오전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정.재계 학계 여성계 언론계 문화계등 각계 인사 88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인류의 단합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승주의무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유엔은 사상 처음으로 내년 10월 정상회의를 열고 안보리 개편논의를 진행하는등 새로운 탄생노력을 하고 있다"며 "유엔 50주년기념은 의례적 행사를 넘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진로 모색의 계기를 위한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어 "정부는 각종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사례로 \*평화유지활동 참여 \*96-97년중 안보리 이사국진출 적극 추진 \*고문방지협약 비준 \*유엔의 국제법 발전및 성문화작업 적극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위원회가 추진할 기념사업에는 유엔관련 홍보책자의 발간및 배포, 청소년을 상대로 한 TV프로그램의 제작.방영, 다채로운 문화공연및 학술행사 개최등이 포함돼 있다.

발행일 : 94/04/08

제 목 : 김영삼 정부, 인권 개선 없어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군사정부 당시보다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9일 비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32년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문민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지난 1년간 새로운 고문과 가혹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수십명의 정치범과 양심수들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김영삼 정부가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위해 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이전 정권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날조된 죄목으로 투옥된 수십명의 양심범이 관련된 사건을 재검토하기위해 기울인 노력도 없다"고 비난했다.

국제사면위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로 약 2백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그러나 8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인권위반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행일 : 94/03/09

제 목 : 고문치사 박종철군 영가 양산으로 옮겨

지난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로 작용, 민주화의 장을 열게했던 고박종철군 (당시 21세, 서울대 언어3)의 영가(영혼)가 7주기를 맞아 경남 양산의 성전암으로 옮겨 영면한다.

고 박종철군의 부친 박정기씨 (65) 등 유족과 민가협(민가협) 등 부산지역 재야단체 회원들은 13일 그동안 박군의 영가를 봉안했던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240의 55사리암에서 7주기 추모법회를 갖고 박군의 위패 등 영가를 새 보금자리인 양산군 하북면 백녹리 성전암으로 옮겨갔다.

박씨 등 유족들은 지난 87년 1월 14일 박군이 숨진 이후 박군의 제를 올려온 당시 사리암 주지였던 도승스님이 양산에 새로 절을 짓고 도량을 옮김에 따라 최근 가족회의 끝에 영가 천위를 결정했다는 것.

유족들은 당초 사리암이 박군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다닌 절인데다 박군도 어린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주 드나드는 등 인연이 깊어 영가 천위 분계를 놓고 무척고 심했으나 박군이 숨진 당시가 5공 말기의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도승스님이 '2.7추도회' '3.3 49재' 등을 직접 집전하는 등 정성을 쏟아온 점을 고려, 정든 사리암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발행일 : 94/01/13

제 목 : **민주, 인권침해 재발방지 요구**

민주당의 강수림인권위원장은 13일 오전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이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강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김기웅순경의 살인누명사건에서부터 건축업자 김동철씨에 대한 만취검사의 폭행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의 엄중처벌 및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보상을 요구했다.

강위원장은 "이같은 사건들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새정부의 사정, 개혁과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강위원장은 지난 5일 인천시내 한 여관에 투숙중이던 건축업자 김씨가 마약복용혐의로 인천지검 강력부 안희권 검사실로 연행된 뒤 술에 만취한 김검사로부터 수갑이 채워진 채 구둑발등으로 폭행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등모두 6건의 인권침해사례를 발표했다.

발행일 : 94/01/13

제 목 : **검찰, <이근안 비호세력> 추적**

구랍21일 김근태전민청련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대 공분실 김수현경감(61)등 전직경관 4명의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이들과 공범으로 5년째 수배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56)

의 공소시효가 재개됨에 따라 검찰이 이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김전경감등의 유죄확정으로 그동안 중지됐었던 이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돼 오는 99년8월이후엔 이씨를 검거해도 독직 폭행혐의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체제를 정비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 이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지검강력부는 지금까지 이씨 관련 수사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사망설, 해외밀항설, 독립행동설, 성형수술설, 자살설, 타살설등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동료들의 비호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검찰은 이씨가 \*오랜 대공수사관 생활을 해온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인데다 \*잠적직전까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자살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또 대공수사비밀 유지를 위해 타살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으나 대공수사관들이 다른 조직과는 달리 유대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가설도 거의 배제돼 있다.

해외밀항설은 그럴듯한 추리이기는 하지만 해외에 그를 도와줄 원조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밀항시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눈에 뵈는 소지가 더 많아 현실성은 적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이씨가 성형수술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 은둔중이거나 탁월한 변장술과 은신술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5년동안 잠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씨가 과거 대공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주변인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도시 근교에 잠적해 있을 가능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공수사조직이 동료간의 유대가 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대공수사관들이 동료비호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자신들을 세상변화의 희생양으로 동정하는 의식이 강한 점등이 이 가능성의 근거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직장을 갖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호세력이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관 10명으로 추적수사반을 편성, 이씨 동료를 대상으로 밀착수사를 하면서 이씨에게 공급되는 자금선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가 이씨 도피를 돕고 있다면 사실상 검거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씨가 제발로 걸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주변부터 죄어들어가는 수사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망이 좁혀질 경우 이씨를 비호 또는 은닉하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불안감을 느껴 자수를 권유하거나 소재를 제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이다. <이영섭 기자>

발행일 : 94/01/06

제 목 : ~~고문경관 이근안씨 출몰 소동~~

\*...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수배중인 고문경관 이근안씨(56)가 5일 오전 서울지역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등 한때

소동.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구로경찰서는 경기 광명경찰서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원풍아파트 부근에 이씨가 나타났다'는 익명의 시민제보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관할 개봉2파출소 직원들을 출동시켜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을 하는등 사실확인 및 이씨 검거에 나섰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하고 결국 허위제보로 결론짓고 철수.

현장에 출동했던 한 경찰은 "특진과 현상금이 걸린 이씨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긴장감을 갖고 출동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아쉽다"며 허탈한 표정.

발행일 : 94/01/05

제 목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유죄확정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검.경의 수배를 받고있는 이근안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의 공소시효가 99년 8월로 잠정 결론 났으며 8년4개월 동안 끌었던 이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도 일단락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1일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불법 체포감금) 및 독직 폭행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된 김수현(59. 전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 징역 2년-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최상남(46. 당시 경위), 백남은(58. 당시 경정), 김영두(55. 당시 경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고문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어 고문도구 등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을 당해 발꿈치에 생긴 상처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고려할 때 김 피고인등의 유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피해자 김씨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88년 12월 서울고법이 김씨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된 뒤 항소심에서 김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백피고인 및 최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김영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발행일 : 93/12/21

제 목 : 수사기관 가혹행위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해배상 잇따라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1년 12월 발생한 서울 봉천동 '대토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구완희씨(30. 서울 관악구 봉천동 41)는 8일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구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12월 봉천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평소처럼 우유배달을 하던 중 관악경찰서 형사들이 아무런 단서도 없이 경찰서로 강제연행한 뒤 눈을 가리고 팔다리를 뒤로 묶은채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이모검사도 증거에 의한 수사보다는 경찰의 송치의견을 추종해 구속기소 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지난 92년 2월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10월에만 \* 시국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으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문국진씨(33. 연세대 철학과 졸)와 \*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귀남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등이 검.경의 불법수사로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이다.

이밖에 \*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학동씨(41)의 경우 검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지난 9월 24일 국가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여동생 방화살인 사건의범인으로 지목됐던 권모군(12)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인정돼 지난 7월초 역시 국가로부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다.

발행일 : 93/11/08

제 목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신청

정부는 늦어도 11월말 이전에 국제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고문방지협약은 가입신청서 접수후 30일 이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말 이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이라면서 <현재 외무부에서는 모든 검토가 끝나 있으며 다만 법무부와 내무부의 의견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연내 가입 방침을 천명했다.

발행일 : 93/09/27

제 목 : 서울민사지법, 검사.수사관 구타등 고문행위 첫 인정

검사와 수사관 8명이 검찰청사내에서 피의자에게 구타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시켰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고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김근태씨 고문 사건,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등 일련의 고문사건이 지금까지는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데 비해 이번 사건은 검찰청사내에서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24일 지난 89년 10월 사기등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검사(41. 사시 19회. 현재 수원지검 강력부장) 방에 불법연행돼 이치균 수사관 등으로부터 30여시간의 가혹행위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가무죄로 풀려난 김학동씨(45. 택시기사. 서울 강동구 암사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수사관들이 89년 10월 23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김씨를 조사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타를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김씨가 주장한 불고문과 통닭구이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김씨는 22개월간의 이번 사건 소송에서 <당시 검찰이 보험료를 노린 고의 교통사고 사건 일제단속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9개월만 지나면 장기근속 무사고운전기사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돼 있던 나를 지목, 30여시간 동안 4개의 조사실을 끌려 다니며 3차례의 겨자씨 물고문(수건을 얼굴에 덮어씌운 뒤 겨자물을 붓는 고문), 통닭구이등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3차례나 실신한 끝에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9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 89년 10월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감사에게 연행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발행일 : 93/09/24

제 목 : <검사기피제, 배심제 도입 사범부개혁을>

재산공개파동으로 대법원장이 물어나고 검찰총수가 사퇴하는등 법조계에 대한 개혁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기피제와 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법학 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교수)가 17일 오후 2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개최한 '법학교육과 사범부개혁' 심포지엄에서 국내법학자들에 의해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백형구변호사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한상범 동국대교수가 <군사통치하의 법률가의 굴종과 영합>, 양승규 서울대교수가 <변호사제도의 개혁>, 강위두 부산대교수가 <법학교육의 개선방향>등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백변호사는 발제문에서 <과거 검찰은 국민편에 서기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비민주성과 자백강요등 비과학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는 검사를 수사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제도 신설 \*불법체포와 같은 임의동행제도 개선 \*사실상 고문과 닮없는 철야수사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법원개혁을 위해 법관도 국민이 선출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지명하고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교수는 <변호사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판사, 검사로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묵인했거나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등록을 거부할수 있도록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법과대학 6년제 개편 \*학과과목 확대 \*법과대학 교수양성과 확보 등을 제안했다.

발행일 : 93/09/17

제 목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항소심서 전원 법정구속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피고인(59) 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후 전원 법정 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5년-2년이 선고된 김수현피고인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 및 형법(독직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피고인 4명에게 징역 3년-징역1년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근태씨 및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때 실제로 고문을 당하지 않았고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등에 비춰, 피해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김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발행일 : 93/08/23

제 목 :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유죄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전치안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88년 2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3월 1심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90년 8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다시 91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기 까지 기소후 5년5개월여만에 종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볼때 강 피고인은 당시 치안본부장으로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전혀 내리지 않았으며 물고문에 의한 사망사실을 알았음에도 박군의 사인을 끝까지 심장쇼크사로 은폐하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전치안본부장은 지난 87년 1월 15일 박군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황적준 법의학과장의 보고를 받고도 당시 박군 수사담당 경관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고 심장쇼크사로 은폐한 혐의로 지난 88년2월 구속 기소됐었다.

발행일 : 93/07/28

제 목 : 고 박종철군 유족에 1억7천여만원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박군의 유족들에게 1심보다 4천여만원이 많은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족의 한 구성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그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신원권)을 처음으로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경찰관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불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만큼 국가와 고문경찰관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에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을 비롯 박처원 치안감, 유정방 경정 등의 진상은폐 행위와 관련, <가족중 일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법 절차에 호소, 그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신원권)가 있다>고 전제, <따라서 강 전치안본부장 등경찰관들의 진상은폐 행위는 박씨등 유족들의 신원권을 침해 <정신적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씨등 유족들은 중철군이 지난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구치안 본부대공분실로 연행된뒤 경찰관들로부터 불고문 등을 당해 숨지자 지난 87년 4월 소송을 냈었다.

한편 강 전치안본부장등은 박군이 숨지자 이틀뒤 기자들에게 <'탁'치니 '억'하고 숨졌다>고 허위발표를 하는 등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은 폐하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발행일 : 93/07/14

제 목 : <주요뉴스> 92년은 인권 대재앙의 한 해

소말리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대학살, 난민 증가, 1백10개국 당국에 의한 고문 자행 등으로 지난 92년은 인권면에서 <대재앙의 한해>였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8일 한 보고서에서 말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세계 국가 대부분이 <인간의 생명을 놓고 정치놀음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사면위는 소말리아와 전유고 공화국에서 살해당했거나 실종된 남녀, 어린이들은 수만명으로 인간 학살은 가히 가공할 만한 수준이며 차드, 중국, 이라크, 라이베리아, 페루, 스리랑카 등에서도 인권 유린 실태는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국제사면위는 세계 1백61개국 중 양심수가 존재하는 나라는 62개, 정부가 고문을 허용하는 나라는 1백10개이며 이중 45개국이 반정부 인사나 문제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사면위는 또 인권을 침해한 나라가 동맹국일 때는 침묵하고 적대국 일때는 맹렬히 비난하는 이중성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국인 중국, 터키, 멕시코 등에 국제 여론으로 압력을 넣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해는 전유고공화국에서 난민 수백만명이 발생하고 미얀마, 베트남, 소말리아, 수단, 예멘, 아이티에서 국민의 계층을

막론하고 망명자가 속출해 난민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해 인권 상황의 주요 특징으로 #이집트, 알제리, 이스라엘점령지 등 중동의 정치, 종교적 폭력 증가#인도 경찰의 피의자 강간증가 #소말리아 파벌들에 의한 민간인 수천명 학살#타지크 전쟁 중 민간인 2만명 사망 #31건으로 크게 늘어난 미국내 사형 집행을 들었다.

대륙별 비교에서 유럽은 보스니아 내전과 구소 공황국들의 상황악화로 최악의 인권 지대로 지적됐다.

아프리카는 잇따른 민주화 일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여전하며 아시아도 특히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은 이란, 이라크에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고문 지역으로 남아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과테말라 등에서 정규 군, 경찰과 더불어 '암살대'(데스 스쿼드)가 계속 활개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대륙 전역에서 최소한 3천7백명이 약식 처형됐다고 국제사면위는 폭로했다.

발행일 : 93/07/08

#### 제 목 : ~~미국대륙 전역에서 대규모 인권침해~~ 보고

지난해 남.북미 지역에서 정부와 국가보안기구들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됐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8일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역내 국가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유형으로 약식처형, '실종', '임의구금과 고문 및 정치적 투옥등을 열거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최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인권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국가들이 별로 없었다>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 기구들이 거리낌없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인권단체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대륙 전역의 11개국에서 최소한 3천7백명이 정부군이나 '암살단'에 의해 약식 처형됐다고 공개하고 콜롬비아와 브라질, 과테말라, 아이티등을 그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특히 텍사스를 비롯해 각주에서 처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난 한해만도 34개주에서 31명의 기결수들이 처형됐으며 약 2천6백명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미국은 범죄 행위 당시 미성년이었던 죄수들을 처형하도록 허용하는 지구상의 6개국중 하나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대륙의 최소한 18개국에서 '실종'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페루등에선 수백건의 실종사태가 발견되고 있다. 또 엘살바도르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멕시코등에선 지난 수년새 수백명이 실종됐다.

정부와 보안군에 의한 고문이나 가혹행위도 26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수감자 학살 사례를 공개하는 가운데 상 파울로의 경우 교도소 폭동사건이후 1백11명의 죄수가 살해되고 35명이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페루에서도 리마의 한 교도소에서 39명의 수감자가 살해됐으며 베네수엘라에선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고로 6명의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상당수 국가들에서 소수민족들이 인권 침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베르타 멘추가 위협을 받은 것을 비롯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등에서 소수민족들이 살해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앰네스티는 정부가 조종한 인권침해 사례외에 야당 단체들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도 목격됐다고 말하고 적어도 8개국에서 무장단체들이 고문과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정치적 이유로 억류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륙 전체에 걸쳐 수백명에 달한다고 이 보고서는 폭로했다.

발행일 : 93/07/07

제 목 : 고문 방지협약 한국 연내가입

한승주외무장관은 15일 <한국은 올해안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엔이 인권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인권회의 이틀째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민주주의가 인권과 개인의 자유, 평화와 발전의 최종적인 보장지라는 굳은 신념 위에서 민주적 이상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발행일 : 93/06/15

제 목 : 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 방침

정부는 고문당한 개인의 국가상대 제소권을 인정하는 부수선언을 포함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엔인권위등에서 고문방지협약 가입방침을 밝혀왔으나 개인이 유엔인권위에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부수선언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선언은 유보하고 본협약만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고문혐의에 대해 유엔인권위에의 제가 가능하며 인권위로부터 파견된 특별조사관을 통해 고문내용을 조사받을 수 있다.

발행일 : 93/05/03

제 목 : 박종철군 고문치사 관련 강민창피고 집유선고

서울고법형사 1부는 2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군 사망후 기자간담회에서 피고인이 사인을 심장소크로 발표한뒤 부검소견발표때에도 가혹행위로 인한 경부압박질식사를 발표에서 제외토록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의 황적중씨가 피고의 지시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했다고 볼수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발행일 : 93/04/02

제 목 : 경찰청, <이근안경감 검거에 총력> 지시

경찰청은 30일 전국경찰에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수배중인 전경기도경 대공분실 이근안경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보낸 전언통신문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를 지양하고 친.인척과 동창 등 연고지 별로 전담수사요원을 배치해 4월 월례보고때 그 명단을 보고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친.인척과 동창생들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전국의 사찰과 암자, 숙박업소, 역.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발행일 : 93/03/30

제 목 : 박종철군 고문치사관련, 경관 3명 징유 판결...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66)등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54). 전 대공수사 2단5과장 2계장 박원택(52)피고인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을 고문치사케 한 조한경경위 등이 검찰조사에서 <박처원피고인등이 범인을 축소. 은폐. 도피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이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진술 할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만큼 박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조경위 등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했다라도 검찰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1월 당시 박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 5명에 의해 불고문을 당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고문에 가담한 경관을 2명으로 축소.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발행일 : 93/02/27

제 목 : 박종철 고문경관 5명중 4명출감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8년과 6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전치안본부 대공수사관 강진규씨(35. 87년사건당시경사)와 반금근씨(47. 87년사건당시경사)가 이미 가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반씨는 91년 12월 각각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 87년 2월이 사건과 관련 조한경씨만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출소했다.

강, 반씨외에 징역 5년형이 확정됐던 황정웅씨(당시 경위)는 지난 90년 12월 24일 형기만료를 1년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고 3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정호씨는 같은해 5월 유일하게 만기 출소했다.

재야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그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 흉악범에 대해선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했어도 가석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비인간적인 고문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문범죄자도 이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 행 일 : 93/01/13

제 목 : 김낙중씨 등 4명 간첩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지검 공안1부는 15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다 검거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씨(57)와 청해실업대표 심금섭씨(63), 전민중당 고문 권두영씨(63),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씨(52) 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납파된 공작원들과 접선, 미화 2백10만달러(한화 16억원상당)를 공작금으로 받아 14대 총선때 민중당후보 18명의 지원자금과 민중당 창당비용, 재야단체 설립,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구속됐었다.

발 행 일 : 92/10/15